

時事資料・第59號

統一教育

統一研究院

北韓動向

■ 對內動向

- 勞動黨 中央委 政治局 會議 開催 7
- 勞動黨 創建 48週年 關聯 動向 10
- 人民軍 指揮官 정치일꾼대회 開催 12
- 道・直轄市 人民會議 代議員 選舉 動向 16
- 金日成, 西海岸地域 협동농장 現地指導 20

■ 對南動向

- 特使交換 관련동향 25
- 對南비방 動向과 新統一戰線戰略 36

■ 對外動向

- 國際的 核制裁 움직임에 對한 北韓의 對應動向 43
- 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 東南亞 5개국 순방 51
- 中國軍 6.25 參戰 43週年 關聯 動向..... 53
- 中國・北韓, 經濟・貿易協調關聯 議定書 調印 56

資 料

- 北韓「土地賃貸法」..... 61
- 北韓의 미사일 開發 및 底意 分析 74
- 北韓의 第48次 UN 總會 基調演說 內容分析 79

特 輯

- 韓完相 副總理, 관훈클럽 討論會 基調演說文 및
질의 · 답변내용('93. 10. 26)..... 85

■ 北韓日誌

■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 動靜

- '93 統一教育專門委員 市 · 道協議會 지역순회 연수
실시현황 167

北 韓 動 向

對內動向

- 勞動黨 中央委 政治局 會議 開催
- 勞動黨 創建 48週年 關聯 動向
- 人民軍 指揮官 정치일꾼대회 開催
- 道・直轄市 人民會議 代議員 選舉 動向
- 金日成, 西海岸地域 협동농장 現地指導

對內動向

勞動黨 中央委 政治局 會議 開催

概 要

- 북한은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10.18)를 개최,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30주년('94.2.25)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한편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과업 관철을 독려(10.20-21)하였음.

〈報道 要旨〉

-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戰略的 문제의 하나임.
- 『농촌테제』발표 30돌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대규모 『전국농업대회』 및 다양한 政治行事를 조직·진행하고
- 앞으로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課業 관철을 위해
 - 농촌 기계화·화학화의 완성
 - 都·農間 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 문화·후생시설 수준 향상
 - 『郡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협동농장들에 대한 企業的 지도를 강화해야 함.

分 析

- 북한 農業政策의 基本方向을 제시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64.2.25 黨 中央委 第4期8次 全員會議에서 김 일성이 발표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 농촌문제의 성과적 해결을 위한 3가지 基本原則으로서
 - ① 철저한 3大革命(思想·技術·文化)수행, ②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 및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강화, ③ 농촌경리에 대한 指導와 管理를 企業管理 수준으로 제고시키고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를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며
 -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基本課業으로서 ① 농촌의 4化事業(水利化, 電氣化, 機械化, 化學化)추진, ② 농민들의 지식·기술수준 제고 및 문화생활 조건개선, ③ 농민들을 集團主義 思想으로 武裝, ④ 농촌에 대한 국가의 政治的 지도 및 技術的·財政的 지원과 농촌경리 指導體系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노동당 중앙위원회 政治局은 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권력의 실질적인 核心體이자 절대권력 기관으로, 주요 현안 문제 토의를 위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치국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는 드문 일임.
- '88. 9 黨 口號決定 발표 및 '91.10 김일성의 中國 訪問結果 토의를 위한 정치국 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음.

- 이번 黨 政治局 會議에서 주목되는 것은
 - 농촌문제 해결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적 문제”라고 강조한 것과
 - 『테제』발표 30주를 決算하는 대규모 『전국농업대회』와 다양한 정치행사 등 사상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할 것.
 - 농업 근로자들의 集團主義 정신발양 및 농촌건설 거점으로 『郡협동 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것 등임.
- 『농촌테제』 발표 30주년이 내년('94.2.25)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절대권력기관인 勞動黨 政治局이 농촌문제를 主要 討議案件으로 이 시점에서 제시,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과업 수행대책을 토의하는 한편 이의 관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 식량문제 해결없이 체제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 『농촌테제』발표 30주년 행사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加重되고 있는 食糧難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한편 내년도 食糧增産을 도모해 보려는 것으로 분석됨.

(북한동향 제147호)

勞動黨 創建 48주년 관련 동향

概 要

- 북한은 10.10 노동당 창건('45.10.10) 48주년을 맞아 별다른 행사없이 로동신문 紀念 社說(“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을 통해 金正日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 나가자고 강조하였음.

< 社說 要旨 >

- 우리 黨에서는 당과 혁명대오, 혁명무력의 진두에 친애한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당의 偉業繼承問題가 가장 빛나게 해결되었음.
- 그 어떤 風波에도 드놀지 않은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공고히 다진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가 우리당 건설에서 이룩한 크나큰 業績임.
- 위대한 수령의 領導밑에 수십년간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우리의 社會主義를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며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임.
- 모두 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두리에 굳게 뭉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따라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가자.

分 析

- 북한이 政權樹立 記念日과는 달리 勞動黨 創建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최근들어 주로 “꺾어지는 해”(40주년, 45주년 등)에 동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임.
- 이번 당 창건 48주년을 맞는 로동신문 社說의 특징은
 - － 종전과는 달리 黨의 발전에 김정일의 업적이 지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 － 이른바 承繼問題가 빛나게 해결된 만큼
 - － 金正日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저지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 나아가자고 강조한 점 등임.
- ※ 10.10 평방, 방송 정론(“민족의 위대한 향도자”)에서도 김정일을 높이 받들으로써 당의 偉業繼承問題가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강조.

(북한동향 제146호)

人民軍 指揮官 정치일꾼대회 開催

概 要

- 10.18-19 평양체육관에서는 오진우, 최광 등 군 고위층과 각 구분대의 지휘관 정치일꾼들이 참석하여 『군 지휘관 정치일꾼대회』를 개최, 金正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戰鬪動員態勢의 강화를 촉구하였음.(중방, 10.19, 10.20)

구 분	행 사 내 용
일 자	○ 1993.10.18-19
장 소	○ 평양체육관
참 석 자	○ 오진우, 최 광, 주도일, 김광진, 김봉을, 최인덕, 백학림, 이두익 등 군 수뇌부 ○ 군중·병중 지휘관 정치일꾼들, 부대· 구분대 모범 지휘관 정치일꾼등
축 하 문 전 달	○ 당 중앙위 축하문 요지(오진우 전달) － 전투동원준비 완성과 대기념비적 창조물 건립 등에 끼친 지휘관 정치일꾼들의 공헌을 지적함.
보 고	○ 총참모장 최 광 보고 요지 － 이번 대회는 하늘 땅이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 와도 모두다 총폭탄이

	<p>되어 김정일 동지를 결사 응위하려는 군 지휘성원들의 신념과 결사의 과오를 과시하려는 충효일심의 대회임.</p> <p>— 문무총효를 겸비하신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을 혁명의 지도자로 높이 모시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군인들이 받아 안은 최대의 영광임.</p> <p>— 지휘관 정치일꾼들이 모든 군인들을 한 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어 당과 수령을 응위하는 진짜배기 충신, 효자로 키우며 최고사령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군의 일심단결, 군민의 일치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함.</p>
맹 세 문 채 택	○ 김일성·김정일에 보내는 맹세문 채택
기념사진 촬영	○ 김일성·김정일과 참가자들 기념사진 촬영 (10.21)

分 析

- 북한은 '90년대에 접어들어 분대장급에서부터 선임하사관, 중대장, 정치군관 등 각 계급 및 임무별로 대규모 軍人集會를 개최하여 왔으며, 금번 『군 지휘관 정치일꾼대회』는 정치일꾼모임으로서는 '91.12.25-26에 개최된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이어 여섯번째임.

- 본대회 개최에 앞서 참가자들은 만경대를 비롯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 서해갑문, 주체사상탑, 3대혁명전시관 등 혁명 사적과 산업시설, 대형 건축물을 참관하였고, 金父子 名義의 표창 및 훈장과 金正日 名義의 선물이 전체 참가자들에게 수여되었음.
- 북한이 이처럼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일주일간이나 평양에 체류시키며 經濟建設 結果物을 시찰시키고 동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 核問題와 관련 國際的 對北制裁 壓力이 加重되고 있는 시점에서
 - 『區分隊』내의 정치군관들의 士氣를 진작하고 그들의 支持와 忠誠心을 확보하며
 - ※구분대 : 인민군 대대급이하의 단위부대를 통칭
 - 그들로 하여금 政治敎養을 강화하여 군 내부결속 및 경제건설 지원, 외부사조 차단, 체제 보위를 목표로한 戰鬪態勢 완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동 대회에서는 崔 光이 보고를 통해
 - 시종일관 정치일꾼들이 革命的 軍風을 확립하고 金正日에 대한 결사옹위와 전군의 일심단결을 촉구토록 하는 외
 -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진짜배기 충신, 효자로 키울 것을 강조하고
 - 북한이 처한 현실을 ‘벽산 환경’으로 인식하며 일단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 와도 모두가 총폭탄이 되어’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軍民이 團結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금번에는 軍部 掌握의 골간이 되고 있는 『구분대』급(대대 이하)의 정치군관들을 소집하여 동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대급 이상의 부대 정치군관들을 소집하여 이와 類似한 大會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북한의 군인집회

일 자	대 회 명	비 고
'91. 7.17	영웅분대쟁취운동 청년군인 선구자 대회	분 대 장
'91.10.17 -18	인민군 사관장(선임하사관)대회	선 임 하 사 관
'91.11.12 -13	인민군 중대장대회	중 대 장
'91.12.25 -26	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중대정치장교
'92. 9. 4 - 5	인민군 모범전투원대회	사 병
'92.10.14	각급 군사학교 교원대회	교 관
'92.10.28	인민군 포병대회	포 병
'93. 3. 5 - 6	군 후방일꾼대회	군수동원책임자
'93. 7.23 -25	전국노병대회	참 전 고 참
'93.10.18 -19	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꾼대회	대대정치장교

(북한동향 제147호)

道·直轄市 人民會議 代議員 選舉 動向

概 要

- 북한은 11.21 실시한 도(직할시) 대의원 선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어 유권자의 99.9%가 투표에 참가, 100% 찬성으로 대의원 3,520명을 선출하였다고 『중앙선거위원회』 명의로 발표하였음.

< 選舉 관련 動向 및 宣傳內容 要旨 >

- 10.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11.21 실시한다고 발표(중앙선거위원장 : 양형섭)
- 10.25까지 각급 선거위원회 구성, 대의원 후보자 추천과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 회의, 선거자 명부 작성 공시, 선거장(투·개표소) 설치 완료 보도
- 11.17, 선거구 선거자 회의가 종료되어 대의원 후보자 추천 종료 보도 및 북한 선거제도의 우월성 선전(11.17, 중방, 평방)
- 선거 당일의 宣傳 내용 요지
 - “지금 당과 인문 앞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과업이 나사고 있음. 오늘 한표 한표가 수령·당·대중의 단결 위력을 과시하게 됨으로 모두 참가하여 찬성 투

포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빛내어 나가야 함”
(11.21. 중방)

- “오늘 선거에서 우리가 바치는 찬성의 한표에는 당과 수령의 고마운 은덕에 끝까지 보답하는 우리의 충성과 효성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11.21, 로동신문 사설)

< 選舉 結果 및 選舉制度 분석 >

- 이번 선거는 '89년 11월에 선출한 대의원의 임기(4년) 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임.
-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91.11 실시한 후 '92년 헌법개정에서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기 때문에 '95년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도·직할시 대의원 수를 3,52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 이는 1개 선거구를 인구 6,500명 기준으로 조직, 1인 선출제도이며
 - '81년 3,705명 발표 이후 '85년과 '89년에는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여 종합 발표만 했었음.
- 투표 참가율 99.9%와 찬성 100% 시현은 북한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형식성을 반증해 주고 있음.
- 찬성을 100%는 '62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의 발표 수치로 이는 투표 절차의 비민주성으로 사실상 공개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투표함에 넣되 찬성시는 투표지를 그대로 넣고, 반대시는 기표소에 들어가 출마자 성명란에 ×표를 하도록 하여 사실상 반대 의사 표시가 불

가능함)

- 100% 투표참가를 위해 이동 투표함 제도로 호별 방문 및 의사 표시대로의 대리투표 진행
- ※ 불참자나 반대자가 있을 때는 당사자는 물론 선거기관 책임자도 문책받게 됨.
- “후보자는 추천회의에서 선거권자들이 직접 추천하고 정당·사회 단체들은 공동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노동당이 내정한 단일후보자만이 추천되어 출마하고 있음.
- 후보자는 해당지역 거주자나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많은 데도 지역 주민 의사가 반영된 것 같이 선전하고 있음.
- 후보자는 등록후 김부자에 충성 연설만 할 뿐 선거운동이나 득표 경쟁이 없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음.
- 이번에 새로히 구성되게 되는 도·직할시 인민회의는 향후 4년간 해당 도·직할시의 경제발전 계획, 예산 등을 심의 승인하고 해당 인민위원회 및 행정경제위원회 간부를 선거하는 등 권한을 갖게 되나(헌법 136조) 실제적으로는 당의 지시를 관철하는 요식기구일 뿐이며 서구적 개념의 『지방자치기구』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함.(지방의회 의장,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 지방 당 책임비서는 1인이 겸직)

< 選舉制度 評價 >

- 북한은 북한의 선거제도만이 일반, 평등, 직접, 비밀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제도라고 선전함.
- 북한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명분하에 主權在民의 민주주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며, 이같은 선거제도에 기초한 그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으나 북한에서의 선거는 일당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고 선거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회침체를 가속화시켜 주고 있을 뿐임.

(북한동향 제152호)

김일성, 西海岸地域 協同農場 현지도

概 要

- 金日成은 9.18-19간 黨 농업담당비서(서관희), 농업위원회 위원장(김원진)을 비롯한 黨·政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平南 온천군 6월3일 협동농장, 3월3일 농장, 黃南 과일군 과수종합농장 등을 현지 지도, 農業增産을 위한 綜合的 機械化, 品種改良 등을 지시하였음.(9.21-22 중방)

< 敎示 要旨 >

< 평남 온천군 협동농장 >

- 6월3일 협동농장과 3월3일 농장에서는 黨의 主體農法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 예년에 보기 드문 大豊作을 이룩하였음.
- 여러가지 농기계들의 생산을 다그치고, 그 이용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組織事業을 철저히 해야 함.
- 水利化·電氣化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우리나라 농촌에서 종합적인 기계화까지 완성되면 우리 농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비약하고, 사회주의 농촌경리의 우월성을 더욱 높게 발휘하게 될 것임.

< 황남 과일군 과수종합농장 >

- 과일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와 함께 유기광물질의 肥料를 많이 주어야 하며, 도시에서 여러가지 거

름을 생산하여 보내주는 한편 농장에서도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해야 함.

- 또한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모든 작업을 기계화해야 하며, 과수면적을 늘이고 오랜 과일나무들은 제때에 어린나무로 바꾸어 심어야 함.

分 析

- 금년들어 김일성의 현지도가 그 회수(예년 2~3회)와 대상지역(예년 3~4개 협동농장)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바, 이는 食糧増産이 最大當面課題임을 반증하는 것임.
- 이번 김일성이 현지도한 平南 서해안지역 협동농장(6월3일, 3일3일)은 북한이 '86년 8월부터 軍人, 靑年突擊隊 등을 투입·개간한 금성간석지(3,300여정보)의 일부 농장으로서 특히 6월3일 협동농장은 김일성이 금년 4월에도 현지지도를 통해 종합적인 營農機械化를 촉구한 바 있음.

<'93년도 金日成 農業部門 現地指導 現況>

일 자	지 역
4. 30	평남 온천군 6월3일 협동농장
5. 4	평양시 평양 과수농장
5. 8	평양시 서포 닭공장
8. 23	함북 연사군 협동농장
8. 31	황남 배천군, 청단군, 연안군 등의 5개 협동농장
9. 10	평양시 송신 협동농장 및 장천 협동농장
9. 18	평남 온천군 6월3일 협동농장 및 3월3일 농장
9. 19	황남 과일군 과수종합농장

- 특히 8월하순 이후부터 김일성이 협동농장을 빈번히 방문하면서 금년 농사를 “대풍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 － 금년도 극심한 냉해 및 병충해로 인한 농산물생산 부진 책임 규명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 － 악화일로에 있는 식량난에 대한 주민동요를 막아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 － 또한 현지확인을 통한 식량수급대책 마련 및 식량증산 독려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서해 간척지 농장인 6.3협동농장과 3.3농장을 방문한 것은
 - － 인력이 부족한 간척지 영농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 증산을 도모해 보려는 것임.
- ※ 북한은 第3次7個年計劃('87-'93)기간중 30만정보의 干渴地를 개간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가도(平北), 증산(平南), 웅진만(黃南) 간척지 등 서해안 14개 지역에서 총 14만여 정보의 간척지 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동향 제143호)

對南動向

- 特使交換 관련동향
- 對南비방 動向과 新統一戰線戰略

對南動向

特使交換 관련동향

特使交換을 위한 제1차 實務代表 접촉

概 要

- 남북한은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10.5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非公開로 진행하였음. 이는 지난 1.25 남북핵통위 위원장 접촉 이후 8개월간만에 재개된 것이며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南北 當局間 對話임.

※ 쌍방 대표 명단

우 리 측	북 측
○ 수석대표 : 송 영 대 (통일원 차관)	○ 단 장 : 박 영 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 대 표 : 김 일 무 (국무총리실 심의관)	○ 대 표 : 최 성 익 (조평통 서기국 부장)
○ " : 장 재 룡 (외무부 미주국장)	○ " : 최 승 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

- 차기 접촉일자 : '93.10.15(금) 10:00

판문점 『평화의 집』

※ 쌍방 주요 입장

우 리 측	북 측
＜실무대표 접촉의 임무＞	
○ 쌍방은 특사교환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기로 인식을 같이 했으므로 실무절차 문제를 순조롭게 타결시켜 특사교환을 하도록 신속히 성사시켜야 함.	○ 쌍방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들을 협의하고 특사교환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문제제도 토의·해결해야 함.
＜특사의 임무＞	
○ 특사교환이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고 그밖의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를 타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함.	○ 특사교환이 비핵화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들을 최고위급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도임.
○ 특사는 상대방 최고당국자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기측 최고당국자의 뜻을 설명	○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 문제, 긴장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문제, 전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문제, 최고위급 회담 실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 특사는 특사접촉 등을 통해 쌍방 정상간의 의견일치점을 확인 정리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 협의	

우 리 측	북 측
<특사의 교환 방법>	
○ 서로 번갈아 방문하는 윤번 교환방식	○ 평양·서울 교환 방문
○ 먼저 북측 특사가 남측 을 방문하고 이어 남측 특사가 북측을 방문	
<특사의 교환시기 및 체류일정>	
○ 첫 방문은 빠를수록 좋음	○ 실무절차 문제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실시하되 빠를수록 좋음.
○ 체류기간은 4박5일 정도 로 하며 구체적 일정은 연락사무소를 통해 방문 5일전까지 협의 결정	○ 체류일정은 협의하여 정함.

분 析

-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 협의와, 특사 교환을 통해서 核問題를 優先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 특사교환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제시하고
- 북측이 요구하는 두가지 요구조건들은 특사교환을 통해 논의할 것을 강조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특사교환 절차문제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제시한 후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등 2개 요구조건을 특사교환을 위한 실천적 대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으로 전제조건화 했으며

- 이밖에도 우리 선박(어선)이 北韓水域을 침범했다면 이를 『간첩선』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 언론의 『북한 생화학무기 개발 실태』 보도를 시비하는 등 이른바 特使交換을 위한 『분위기조성』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였음.
- 이번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는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중 쌍방이 제시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충분히 의견접근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토의 기피로 인해 아무 진전이 없었음.
- 북한이 이번 접촉을 가진 의도는
 - 美·北韓間 3단계 회담 성사를 위해서 『남북대화 진행중』이라는 최소한의 모양을 갖추고
 - 內外與件의 변화 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특사교환을 성사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고 한 것으로 분석됨.

(북한동향 제145호)

特使交換을 위한 第2次 實務代表 접촉

- 南北韓은 10.15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特使交換을 위한 제 2차 실무대표 접촉을 비공개로 진행, 특사교환 실무절차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음.
 - 우리측은 實務節次 問題에 있어서 제1차 접촉시 제시된 양측 의견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촉구하였으나 北側은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의 전제조건에 대한 우리측의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회의는 진전이 없이 종료되었음.
 - 한편 북한은 10.15 북측대표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번 실무대표 접촉 내용을 보도(중앙방송)하였는 바, 동 방송은
 - 우리측의 실무절차안이 “형식에 치우치고 내용이 없으며, 특사의 임무와 관련한 핵심 문제가 뚜렷하게 제기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 “특사교환 앞에 놓여 있는 빚장”을 놓아 둔채 실무절차나 토의 하는 것은 “특사교환을 성사시키려는 성의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난하였음.
- ※ 제3차 접촉일자 : 1993.10.25(월) 10:00, 판문점 『통일각』

(북한동향 제146호)

特使交換을 위한 第3次 實務代表 접촉

- 남북한은 10.25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特使交換을 위한 第3次 實務代表 接觸을 非公開로 進行하였음.
 - 接觸에서 우리측은 두가지 요구조건(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포기)을 고수하고 있는 북측 회담 자세의 不當性을 지적하고 쌍방이 제시한 바 있는 절차문제의 토의에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였음.
 - 북측은 첫발언을 통해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초안)』를 제시하였으나 지난 1,2차 접촉에서와 마찬가지로 두가지 요구조건을 또다시 들고나와 이에 대한 우리측의 태도 표명을 요구하였음.
-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두가지 조건 문제를 실무대표 접촉에서 다룰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특사교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임을 재차 주지시켰음.
- 이번 3차 접촉에서도 북측의 요구조건 고수 입장 및 실질 문제 토의 회피로 인해 쌍방 합의서(안)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접촉을 종료하였음.
 -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두가지 요구조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형식을 갖춘 합의서(안)를 제시한 것은 특사교환 실현 의지가 있는 듯 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미·북한 3단계 회담 성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짐.

※ 차기 접촉일자 : 11.4(목) 10:00 판문점 『평화의 집』

(북한동향 제148호)

特使交換을 위한 第4次 實務代表 접촉거부

概 要

- 북한은 11.4 개최기로 합의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 대표 접촉을 우리측 국방부 장관의 KBS-TV 대담 발언(11. 2)을 이유로 거부하는 對南電通文을 박영수 단장 명의로 우리측 송영대 수석대표에게 11.3 보내왔음.

— < 對南電通文 要旨 > —

- 우리 쌍방 대표들은 3차례의 접촉을 통해 11월안에 특사의 첫 교환방문을 성사시키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제4차 접촉이 진행되면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리라는 전망도 있었음.
- 바로 이러한 때에 귀측 국방부 장관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개발을 걸고 들면서 軍事對應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위협천만한 폭언을 하였음.
- 이와 같은 형편에서 쌍방은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 접촉을 예정대로 가지기 어렵게 되었으며 우리측 대표단도 판문점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음.
-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귀측에 있다고 간주하면서 일정한 시일을 두고 귀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임.

- 이어서 같은 날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광진 차수 명의의 糾彈談話를 통해 우리측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격렬히 비난하였음.

(11.3, 중·평방)

< 김광진 談話 要旨 >

- 문민정부의 國防部 長官이 이처럼 무모하고 도발적인 언동을 한데 대해, 더욱이 미국과의 安保年例協議會를 하루 앞두고 이러한 호전적 소리를 한 사실에 주목하며 여기에는 특사교환과 朝·美 會談에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어가려는 위험한 기도가 숨겨져 있음.
- 조·미간 3단계 회담이 일정에 올라 있고 북남 사이에는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남조선의 군사당국자가 軍事的 對應을 운운하여 나선 것은 현 정권이 文民政權임을 부정한 것이며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도 전면 거부한 것임.
- 대화에는 대화를,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 있음. 군사적 대응은 곧 전쟁임.

分 析

- 북한이 11.4 개최 예정이었던 特使交換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 접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접촉을 거부한 것은

- 11.2 있었던 UN總會에서 IAEA의 核査察 수용을 촉구한 對北 決議案이 북한만의 반대로 통과된 사실에 대한 충격과(찬성 140, 반대 1, 기권 9개국)
- 그동안 4차에 걸친 美·北韓 막후 實務接觸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완강한 태도로 3단계 회담 개최가 불투명해 진데 따른 불만
- 제2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11.2~4, 서울)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접촉 거부의 구실로 내세운 우리측 국방부 장관의 핵관련 발언은 그 문맥과 내용상으로 보아 그들 주장대로 “군사적 대응 불사 발언”이 전혀 아님. 그러나 KBS마감뉴스시간에 뉴스 진행자가 “군사적 대응 불사 계획”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보임.

<우리측 국방장관의 KBS-TV 9시 뉴스 대담 요지>

- 문 : 북한 핵사찰을 촉구하는 UN의 결의문이 있었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그리고 미국측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협상하실 생각이신지요?
- 답 : 『... 그래서 이에 대응을 우리 군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군 으로서는 우선 국제적인 안보기구 내지는 공조체제에 의 해서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고 그래도 (북한이) 전향 적인 자세에 변화가 없어 제재를 할 경우에, 군사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우발적인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재 국방부로서 이번 한미 안보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려는 문제입니다.』

※ KBS-TV마감뉴스에서 진행자의 인용

『권국방장관은 북한이 끝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장관은 제 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KBS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 특히 韓·美 年例安保會議와 관련하여 11.3 한·미 양국國防長官은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실시 여부 결정을 유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4차 접촉 이전에 한미 양국간에 훈련중단이 결정되기를 기대하였던 데에 대한 차질도 실무접촉거부의 요인이 된 것으로 추측됨.

- 북한의 이번 실무대표 접촉 거부는

- 최근 북한 核問題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상황(UN 대북결의안 채택,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미·북 3단계 회담 등)에 대한 새로운 對處方案을 모색할 시간벌기의 의도로 보이며

- 따라서 이번 접촉거부가 곧 特使交換의 전면 거부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분석됨.

※ 북한은 대남전통문 말미에 “... 일정한 시일을 두고 귀측의 태도를 지켜볼 것입니다”라고 표현하였음.

- 한편 우리측 송영대 수석대표는 11.4 북측 박영수 단장에게 보낸 電通文을 통해

- 북측이 부적절한 구실을 내세워 접촉을 일시 중단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 최근 국제사회가 북측이 核安全協定 의무를 준수치 않는

데 대해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 점과, 핵문제 해결을 지연
시킴으로써 국제 제재를 자초하게 되는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게 되기를 강조하면서

- 一 核問題를 둘러싼 사태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루
속히 실무 대표 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
였음.

(북한동향 제149호)

對南 비방동향과 新統一戰線戰略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93. 4)를 계기로 청년학생층의 투쟁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까지 이를 신통일전선론으로 위장, 선동하는 등 통일전선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최근 대남 비방동향에서 드러나고 있다.

北韓의 이러한 대남공세는 감상적 민족의식을 분출, 지역분쟁을 확산시킬 탈냉전이후의 시대적 상황과 특히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일기조로 하는 韓國 신정부의 민족통일 의지에 편승, 국론분열 조성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신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경과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틱스피리트 훈련재개, 국가보안법 폐지 거부, 제4차 범민족대회의 무산과 특사교환의 전제조건 철회요구 등을 거론, 현 문민정부는 『식민지 군사독재체제에 기반을 둔 파쇼체제 위에도 문패만 바꾸어 달았다』고 강도높게 비방한 바 있다. 또 이날 평양방송도 美-北회담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언급내용을 지적, 『아무 권한도 없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할 계제가 못된다』고 주장, 「자주성」이 없음을 비난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선동했다.

범민족대회 개최를 불허한 韓國정부를 「파쇼정권」이라고 매도한 北韓은 또 『민족의 중대사인 통일대화를 어떻게 이런 ×들에게 내맡길 수 있겠느냐』고 규탄하면서 각계 각층의 폭넓은 접촉과 대화를 촉구해 나서기도 했다.

이와 같이 새정부 출범이래 문민정권이 자주성없는 파쇼정권이라는데 대남비방을 집중, 청년학생의 통일전선투쟁을 촉구해 온 北韓은 「10대 강령」 제의이후에는 또 이를 새로운 통일전선론으로 선전, 일반국민에게까지 통일전선투쟁을 확대, 선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10대강령」의 원칙과 실천방도들은 남북과 민족성원 누구에게나 손해를 주지 않도록 공명정대성이 반영되어 있어 전조선동포는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아래 민족대단결을 실현, 통일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은 이 강령이 주체적 민족관에 기초하여 민족문제 해결의 길을 밝혀주는 「정치강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일전선운동 발전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었다』고 주장, 기존 통일전선전술과 다른 신통일전선론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지난시기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제기한 통일전선문제는 일정한 계급계층과 맺는 「일시적」인 연합과 「전술적」인 동맹에 관한 문제였다면 金日成은 이를 「전략적인 정치적 연합」의 문제로 제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과거와 다른 「우리식」 통일전선론

이 통일전선론은 과거의 「사회혁명」을 위한 통일전선 강령과는 달리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연합」을 위한 강령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으로 지도적 지침을 바꾸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선언한 北韓은 이번 마르크스-레닌의 「전술적」 통일전선론과 결별, 「전략적」인

「우리식」의 주체적 통일전선론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北韓은 「10대강령」이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전선강령이기 때문에 통일투쟁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까지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5.4 「10대강령」 토론회).

남북간 정쟁중지(제4항), 승공과 적화의 위구심 지양(제5항), 통일공로자의 평가문제(제10항) 등 단결방도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국가소유와 사적소유의 인정(제7항) 등이 그러한 담보라는 것이다.

北韓은 이처럼 통일전선 문제를 「정치적 연합」을 위한 「전략적 문제」로 보고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일단 손을 잡은 사람과는 끝까지 단결하고 나라의 융성·번영을 위해 함께 나갈 데 대한 주체적 통일전선 사상을 구현한 것』이라는데 지난시기 통일전선운동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통일전선론은 지난날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도 과거를 뒤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할 것을 제시(제10항), 仁德정치와 廣幅정치를 구현하고 있어 누구나 다 함께 단결하여 나갈 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定式化한 것이라 한다. 이와같이 주체적 통일전선 사상은 특정계층을 종속적 관점에서 「일시적」 동반자로 보아왔던 기성이론의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 기만전술 위장한 신통일전선론

주체적 민족통일전선 사상은 金日成이 카룬회의(1930. 6)에

서 「反日민족통일전선」을 제시한 이래 조국광복회(36.5), 해방 후 사회주의건설 투쟁에서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과 南·北朝鮮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48.4)에서의 「反美구국통일연합」, 70년대의 「7.4공동성명」과 90년대의 범민족대회 및 「10대강령」 등을 통해 일관되게 구현되어 오고 있다고北韓은 그 「전략적」 성격을 내세우고 있다.

「10대강령」 제의 이후北韓은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韓國 신정부가 5, 6공을 승계한 「과소정권」이며 「자주성 없는 식민지 괴뢰정권」이라고 중상모략, 청년학생의 투쟁을 부추기는 한편 「10대강령」을 내세워 일반 국민에게까지 신통일전선론을 확대하는데 對南비방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같은 對南비방 동향은韓國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퇴색하게 된 「反과소민주화」 투쟁에 새로운 명분을 제공, 약화된 운동권 조직을 추스려 「反美자주화」 투쟁 등 감상적 통일론의 열기를 부추기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핵개발과 연방제통일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北韓은韓國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과 핵사찰 압력을 봉쇄키 위해 우선 문민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시킴으로써 反정부, 反美 민족통일전선을 확대, 「南朝鮮혁명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평양방송은 지난 20일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은 남조선 인민운동의 경험은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韓總聯을 중심한 청년학생의 통일투쟁 강화를 독려, 對南비방목적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노동신문(9.14)이 문민정부출범 6개월을 평가하면서 『역사의 교훈과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에서 민족자주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이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증상, 『문민정권이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고 모략한데서도 그러한 의도가 뒷받침되고 있다.

北韓이 주체적 민족통일전선론에 대해 통일이후까지도 공동번영할 것을 담보하는 「전략적」 정치연합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그때까지 통일전선에 대한 韓國民의 불신감을 해소, 각계층이 통일 연대투쟁에 동참하도록 기만하기 위한 「전술적」·「일시적」 통일전선전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反日민족통일전선의 「전략적 강령」이 해방후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일관되게 구현되었다고 주장하는 北韓에서 曹晩植 등 민족주의자는 물론, 연안파와 소련파 등 같은 계층내의 혁명동지들까지 숙청한 사실이 「전략적」 강령의 기만성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신통일전선론으로 연방제 통일을 실현,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완수하는 것을 통일의 단계적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계급간 연합이 이루어졌다하여 계급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毛澤東의 통일전선론은 北韓의 신통일전선론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체적 민족통일전선론은 사회주의혁명 완수를 위해 「계급해방」을 전술적으로 그 속에 숨기고 있는 「트로이의 木馬」인 것이다.

(내외통신 제866호)

對外動向

- 國際的 核制裁 움직임에 對한 北韓의 對應動向
- 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 東南亞 5개국 순방
 - 中國軍 6.25 參戰 43週年 關聯 動向
- 中國・北韓, 經濟・貿易協調關聯 議定書 調印

對外動向

국제적 核제재 움직임에 대한 北韓의 대응동향

北韓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10월 1일 제37차 총회를 통해 핵안전협정의 즉각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다.

北韓 외교부 부부장 송원호가 제48차 UN총회 기조연설(10.5)을 통해 기존의 핵사찰 거부입장을 재천명한데 이어 원자력공업부장 崔學根이 11일 성명을 발표, 유엔사무총장이 IAEA 제37차 총회 앞으로 보낸 서한이 「날조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IAEA와 UN의 불공정성을 이유로北韓 핵문제는 「조-미 회담」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스 브릭스 IAEA 사무총장은北韓이 핵사찰을 회피하기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北韓은 「통상 및 임시사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시한은 감시용카메라의 필름과 배터리의 작동이 중지될 것으로 보이는 10월 말이 될 것이고, 만일 통상사찰을 받지 않는다면北韓 핵문제를 UN안보리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北韓 핵문제를 중심으로한北韓-IAEA간의 첨예한 대립은 UN안보리에 의한 제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미 UN안보리는 지난 5월 11일北韓에 대해北韓이 채택

한 NPT탈퇴 결정(3.12)의 제고와 IAEA의 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 제재조치를 내리겠다는 내용의 제1차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핵카드를 이용하며 교묘하게 탈출구를 찾아 왔고 현재까지도 핵사찰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고 있다.

北韓은 핵카드를 이용하여 첫째, 내부적으로 金正日의 위기관리능력 과시를 통해 후계체제를 공고화했고 둘째, 한국·미국·일본 등으로부터 對北 유화정책을 도출했으며 셋째, 「원췌」인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美國의 「北韓에 대한 위협」을 약화시키는 성과를 획득했다.

◆ 유리한 상황점유 위해 핵카드 이용

현재까지도 北韓의 핵카드는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다. 즉 美國은 北韓과의 2회(10.19, 10.21)에 걸친 비공식 접촉을 통해 T/S훈련 중지 및 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를 「아무 의미도 없는」 IAEA통상사찰 수락 및 남북대화 재개와 연결하여 일괄타결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올림픽유치 무산 이후 핵실험을 재개하는 등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과 프랑스가 핵실험을 재개할 의사를 피력한 점, 파키스탄의 부토총리가 핵개발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등 「북한식 국제공조체제」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UN안보리의 對北 제재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인가가 의문이고 UN제재조치가 어느정도의 효력을 나타낼

것인가도 의문이다. 결국 北韓은 빨치산식 위기타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핵카드를 이용해 최악의 상황을 피해가고 있고 현상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北韓은 핵카드가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이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카드놀음을 지속하려 한다면 그 효과에 관계없이 국제사회는 北韓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가변적이겠지만 UN의 對北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北韓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UN의 對北 제재안이 가결된다는 가정하에 UN제재에 대한 北韓의 대응태도를 몇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해 본다.

첫째,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서 전면적 남침을 상정해 볼 수 있다.

北韓은 기회있을 때마다 北韓에 대해 국제제재가 가해지면 「중대한 후과」가 있을 것임을 천명해 왔다. 과연 이 중대한 후과나 대응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이것은 군사적 대응을 의미할 것이다. 北韓의 군사력은 현재 대부분이 휴전선 부근에 포진해 있다.

물론 北韓은 이것이 효율적 방어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사시 南韓의 북침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진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 對北제재시 남침가능성 배제 못해

北韓은 이미 1962년부터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여 왔고 결국 南韓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개발을 위시하여 각종 생화학무기, 노동1호미사일, 숫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병력 등은 결국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증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호전적인 北韓軍은 언제든지 적절한 이유만 발견되면 남침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北韓은 舊蘇聯,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해 깊은 좌절에 빠져 있고, 경제 낙후로 인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미제」와 「남조선 괴뢰」에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UN의 제재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로 「이판사판식」으로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국지전 도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北韓은 휴전기념일(7.27)을 「전승기념일」로 제정하여 그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 즉 6.25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을 효율적으로 방어한 승리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남침하여 전한반도 공산화에 실패하자 南韓의 북침에 대항하여 최소한 北韓지역을 방어했다는 의미에서 「승리」라고 인민들에게 허위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다. 이것은 향후 北韓태도를 예측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金正日は 1980년 권력 전면에 등장한 이후 당권 장악에 매진하였고 이것은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빨치산국가인 北韓에서 군사작전 능력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불공정성 내세워 UN탈퇴 시도 예상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金日成은 일제와 피나는 빨치산 투쟁을 하여 국가를 수립하였고 「미제」와의 민족해방전쟁을 통해 국가를 방어하였지만 金正日은 軍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한 위기관리경험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있을 지도 모를 「미제」와의 전쟁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조국을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군부는 물론 인민들까지도 우려하고 있을 정도라 한다.

따라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金正日은 南韓과 UN이라는 「공동의 적」을 겨냥하여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첫째, 金正日이 南韓에 대해 일단 국지전을 일으키고 재빨리 휴전하여 인민들에게는 「戰勝」으로 선전하고 이를 통해 군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권력승계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金日成이 한국전쟁의 책임을 물어 각 파벌을 숙청했던 것처럼 金正日도 그동안 그에게 의구심을 보였던 자들을 이적분자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UN탈퇴 가능성이다. 北韓은 전통적으로 UN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것은 UN이 창설 이래 美國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은 UN을 불신하여 왔고 원칙적으로 UN가입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만일 UN가입을 한다면 남한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고 南韓 단독의 UN가입이 가시화되자 서둘러 전술을 변경하여 1991년 UN에 南韓과 동시 가입하였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北韓은 UN과 산하기구인 IAEA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일 UN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北韓에 대해 경제제재 등 강력한 책벌을 가할 경우,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UN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北韓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지만 역사적으로 합리적 선택만했다고 볼 수 없는 北韓으로서는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 전향적으로 개혁·개방 선택할 수도

넷째, NPT탈퇴의 기정사실화이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北韓은 지난 3월 12일 NPT탈퇴라는 강경책을 채택한 이후 美國과의 직접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많은 소득을 올렸다. 따라서 北韓은 제1단계 北-美 고위급회담(6.11) 직후 발표한 北-美 공동선언에서 NPT 잔류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즉 北韓은 「필요에 의해 잠정적으로 탈퇴를 유보한다」고만 명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NPT탈퇴는 北韓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그 효용성이 복원될 수도 있다.

北韓은 UN제재에 대한 반발로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또다

시 美國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으며 NPT 복귀문제를 카드로 美國과 南韓으로부터 엄청난 실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UN제재에 반발하여 완전한 의미에서 폐쇄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즉 北韓은 UN제재를 감수하면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력갱생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다.

北韓은 비축된 油類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 등 모든 유류동력의 운행을 중지할 것이다. 또한 北韓은 中國 등의 암시장을 통해 최대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궁여지책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식량난을 견디지 못한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金日成·金正日이 난국타개를 위해 전면전 내지는 국지전을 도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北韓이 UN의 제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핵사찰을 받고 「방충망」식 개혁·개방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北韓은 현재 경제적 낙후, 세습체제에 대한 불만, 관료들의 세도와 부패, 외국에 대한 동경 등으로 인해 「우리식 사회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즉 北韓은 언젠가는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혁명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金日成·金正일을 중심으로한 권력엘리트들은 UN제재를 상황변전의 계기로 삼아 UN제재 해제와 체제인정, 경제원조 등을 연계하여 개혁·개방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정책이 채택된다면 보다 개혁지향적인 인물들이 정치전면에 등장할 것이고 권력이 분산될 것이다.

남북간에는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

등이 일괄타결됨으로써 최소한 남북연합단계로 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美國·日本과의 수교가 가시화되고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이다. 물론 개혁·개방은 北韓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를 통해 北韓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보다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北韓은 내심 UN의 제재를 기대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내외통신 제871호)

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 東南亞 5個國 순방

概 要

- 楊亨燮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9.24 ~10.20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스리랑카 등 東南亞 5個國을 순방하고 10.23 귀환하였음.

※ 대상국별 일정

대 상 국	기 간
인 도 네 시 아	9. 24~10. 1
싱 가 포 르	10. 1~10. 5
라 오 스	10. 5~10. 9
태 국	10. 9~10. 17
스 리 랑 카	10. 17~10. 20

分 析

- 북한은 금년 상반기중 黨·政 고위 대표단을 동남아 및 서남아지역에 집중적으로 파견, 이 지역 국가들과의 親善紐帶關係를 강화하고자 하는 등 “아시아 重視 外交”를 전개해 오고 있음.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 파키스탄, 이란, 요르단, 시리아 순방(1.29~3.5)

이종옥 부주석 :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순방(3.23~4.6)

지재룡 당 부부장 : 태국, 네팔, 인도 순방(1.23~3.9)

정태화 대사 : 파키스탄, 인도네시아(1.29~2.10)

황장엽 당 대표단 : 인도 방문(5.1~5.13)

김영남 외교부장 : 인도네시아 방문(5.18~5.22) 등

○ 양형섭은 이번 순방기간중 각국의 大統領(國王), 首相, 國會議長 등과의 면담을 통해

— 북한의 核問題, 한반도 통일문제, 북한의 대외정책 등을 설명하고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國會議長들과의 회담에서는 의회간 협력강화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와는 아세안국가로서는 최초로 『議員親善協會』를 구성하였음.(9.25)

○ 북한은 이번 양형섭의 순방을 통해 그들의 核問題에 대한 이 지역국가들의 疑懼心을 불식시키는 한편, 議會 차원의 친선·협력관계 증진으로 방문국들과의 협력 강화 기반을 구축코자 한 것으로 보임.

(북한동향 제148호)

中國軍 6.25 參戰 43週年 관련 동향

概 要

- 북한은 중국군의 6.25 參戰('50.10.25) 43주년을 맞아 10.25 충참모장 최광, 부총리 강희원, 중국대사 喬宗淮 등이 참가한 가운데 『조·중 우의탑』 등의 헌화행사와 인민무력부 주최 기념연회를 개최하여 北·中 親善關係의 강화 발전을 강조하였음.

〈宴會 兩側 演說 要旨〉

- 중국 공산당 第14次 大會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여 한나라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함.(전재선 부총참모장)
- 中·朝 두나라 인민들은 피와 생명으로서 두 사회주의 나라를 지켜냈으며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였음.
(교종회 대사)
- 오늘의 국제정세는 복잡하고 급변하며 제국주의가 여전히 霸權主義와 強權政治를 감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중·조 친선을 강화하는 것은 중대한 현실적 의의를 가짐 (교종회 대사)

分 析

- 북한은 매년 이와 같은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 － 駐中 북한대사관에서 중국의 관 및 당·정 고위인사를 초청, 연회를 개최하여 血盟關係를 선전해 왔고
 - － 작년에는 한·중 수교(8.24)에도 불구하고 軍事 親善代表團을 상호 교류한 바 있음.
- 금년 관련행사 및 연회 연설에서의 특징은
 - － 중국은 기념사절단 방북이 없는 年例的 行事 수준이었고
 - － 북한은 종래와 달리 對美非難을 자제하였으며
 - － 중국은 “제국주의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감행”이라고 거론, 핵실험 재개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한 불만을 간접시사했으며, 북·중 친선협조관계가 대를 이어 질 것임을 강조하였고
 - － 로동신문 논설(10.25)을 통해 “중국 인민지원군의 參戰은 피로 대어진 조·중 친선의 공고성을 과시한 歷史的 事變”이었음을 주장한 점임.
- 최근 북한과 중국관계는
 - － 중국은 지난 7월 휴전 40돌 기념관련 중국의 黨 政治局 常務委員(호금도) 및 國防相의 방북과 9월 全人大 대표단(단장: 상무위 부위원장 왕한빈)의 방북을 계기로 “친선관계의 강화 발전 노력”을 다짐하고 南北對話를 권유한 바 있으며
 - － 북한은 “조선통일을 위한 유관국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핵문제 및 북한의 對美·日 關係改善에 중국의 지원을 요

청한 바 있음.

- 한편 중국과 한국은 10.28 韓·中 外務長官 會談에서 연내에 양국대사관에 무관부를 교환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經濟的 交流增大와 함께 양국 관계를 증진시켜 가고 있음.

(북한동향 제148호)

中國·北韓, 經濟·貿易協調 관련 議定書 調印

概 要

- 北京放送(10.7)은 방북중에 있는 중국 정부무역대표단(정사 립 대외 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이 10.6 북한측 무역대표단 과 經濟·貿易協調에 대한 議定書에 調印했다고 보도하였음.

〈議定書 主要 內容〉

- 쌍방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협조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
- 양국간 경제·무역에서 협조 형식 다양화를 추진
- 양국간 경제·무역 해당부문간 접촉·연계 강화 및 경제·무역협조의 발전을 추진
- 양국간 진일보한 국경무역분야 협조를 강화하여 쌍방 국경지대의 경제발전을 추진

分 析

-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는 互惠·平等의 原則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나 '80년대까지의 북·중 경제관계는 상호 긴밀한 정치적 유대를 바탕으로 사실상 중국의 施惠의 形態로 유지되어 왔음.

- '90년대부터는 국제적인 脫이데올로기 추세의 확산, 중국의 經濟的 實利優先政策 등의 영향으로 쌍방 무역 및 경제협력방식의 변화가 시도되어 왔음.
- '92. 1 체결된 『朝·中 貿易協定』에서는 중국측의 요구로 양국간 무역은 國際價格基準, 硬貨決濟方式을 채택
- 그러나 이러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生産不振 및 硬貨不足으로 북한 대중국 수출 및 결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번에 체결된 經濟·貿易協調 議定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도내용에서 경제·무역분야 “협조수준 제고”, “협조형식 다양화”, “국경무역분야 협조 강화” 등이 強調된 것으로 보아
- 쌍방간에는 既 체결된 무역결제방식의 준수, 기존의 中央政府間 무역 및 경제협조와 병행하여 지방정부차원이나 기업간의 合作·合營事業 및 변경무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93년도 상반기 북·중 무역규모는 총 4억 3,120만달러 (대중국 수입 3억 1,470만달러, 대중국 수출 1억 1,650만달러)임.

(북한동향 제145호)

資

料

- 北韓「土地賃貸法」
- 北韓의 미사일 開發 및 底意 分析
- 北韓의 第48次 UN 總會 基調演說 內容分析

北韓「土地賃貸法」

概 要

- 北韓은 11.4 중앙통신을 통해 제9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0.27)에서 決定·採擇한 『土地賃貸法』(6장 42조) 全文을 공개하였음. (전문 첨부 참조)

〈주요 내용〉

-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제1-8조)
 - 적용대상, 취급기관, 임대기간 등 규정
-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제9-14조)
- 제3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제15-27조)
- 제4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제28-33조)
- 제5장 토지이용권의 반환(제34-38조)
- 제6장 제재 및 분쟁 해결(제39-42조)

分 析

- 이번 法令은 북한이 나진-선봉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 外國投資 誘致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금년 1월에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화관리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발표한데 이어 그 後續措置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임.

- 이번 『土地賃貸法』은 中國의 土地관련 法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며, 主要 特徵으로는
 - － 外國투자자와 外國기업에 대해 土地利用權의 販賣, 再賃貸, 贈與, 相續을 허용한 점(제16조),
 - － 電氣,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의 投資費用을 土地開發費로 賃貸料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제29조),
 - － 계약상의 賃貸期間 만료 후 투자자가 투자한 건물 및 기타 부차물을 無償으로 반환토록 한 점(제34조),
 - － 土地賃借者의 土地利用權 讓渡時 북한당국의 優先的 購買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19조) 등임.
-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生産手段의 國有化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土地利用權을 私有財産權으로 인정하고 販賣, 再賃貸, 贈與 등을 허용한 것은 經濟開放으로 향한 進一步한 措置로 평가할 수 있음.
- － 『土地賃貸法』의 근거법으로서는 『外國人投資法』('92.10) 제15조 토지임대 및 임대토지의 양도, 상속규정
- 『土地賃貸法』은 그 내용면에서 既存의 『합영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등 外國人投資關聯法에서 나타난 것처럼 中國의 관련법을 대부분 援用한 것으로 보임.
- ※ 『中華人民共和國 都市國有土地使用權 讓渡·再讓渡 暫定條例』 참조 ('90.5.19, 중국 공무원 공포)
- 그러나 북한의 기존 外國人投資關聯法들이 中國보다 外國投資者에게 유리한 점이 많았으나, 금번 『土地賃貸法』은 中國에 비해 外國投資者에게 不利한 점이 있음.

- 土地賃借者の 토지이용권 양도시 北韓當局의 무조건적 優先購買權 보유(제19조)
- 電氣, 通信 등 대부분의 社會間接資本施設 건설비를 土地開發費로 임대료에 포함시킴으로써 賃貸料가 中國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 농후(제29조).
 - ※ 북한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도시 중심구역』의 工業用 土地에 대한 연간 賃貸料는 m²당 4.5원(2달러)이며, 工業用 土地에 대한 土地開發費는 m²당 110원(50달러)임.
 - (『황금의 삼각주』,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93년 발간)
- 계약상의 賃貸期間이 끝난 후 토지에 대한 권리가 북한당국에 歸屬時 投資者가 투자한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을 無償으로 반환(제34조)
- 특히 남북경협시 우리기업이 경계해야 할 점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土地賃貸를 入札方式에 의할 경우 北側의 意圖에 따라서는 국내 업체간에 競爭을 誘發함으로써 본격적 사업착수 이전에 土地使用權 문제로 업체간에 過當競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土地利用權 讓渡가 허용되고 있으나 북한당국이 優先購買權을 보유하고 있어 賃借者가 土地利用權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土地利用權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당초 利用目的에 따라서만 사용케 하여 業種의 변경을 어렵게 함으로써 土地利用權의 讓渡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리측 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우리의 현행 南北交流協力法上 對北 經濟協力事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工場立地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고, 해당지역의 土地賃賃料 등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나,
 - 이번 북한의 『土地賃賃法』에 의하면 입찰의 경우 入札保證金을 선납하고, 또한 協議·競買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후 15일내에 10%의 履行保證金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우리의 교류협력법과 북한의 『土地賃賃法』이 법절차상 相衝되고 있어 우리측 기업의 대북 협력사업추진의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 北韓이 '84.9 合營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화관리법 등을 연이어 제정 발표하고, 社會主義經濟體制의 生産手段 國有化 원칙의 例外를 인정한 것은 당면한 經濟難의 打開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를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投資誘致를 위해서는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擴充이 매우 중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에 투자를 개방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의 낙후된 社會間接資本 施設이 먼저 획기적으로 改善되지 않는 한 『土地賃賃法』의 제정이 投資誘引策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임.

〈첨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제9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채택('93.10.27)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4조 토지임대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자유경제 구역지대에서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5조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다.

제6조 토지임대기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임대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한다.

제8조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이용한다.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 대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약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 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이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 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 및 개찰 날짜,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 조건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낙찰자에게 낙찰 통지서를 발급한다.
8.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지불한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를 받을 수 있다.
9.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낙찰자가 정한 기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13조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3. 낙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제14조 토지임대차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서 남은 이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몹을 투자해야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들도 함께 넘

어간다.

제18조 토지이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권 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3.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제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 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토지이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22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는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저

당등록을 해야 한다.

제24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 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5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 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 계약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제26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안으로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다.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30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의 합의밑에 5년안에 분할해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

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해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32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 50일간 물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자는 해마다 국가가 정한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장 토지용권의 반환

제34조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를 40년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 수 있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이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권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6개월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 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이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해야 한다.

제38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기간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안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며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해준다.

제6장 제재 및 분쟁 해결

제39조 토지이용증이 없이 토지를 이용했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켰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40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총투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1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신소청원하거나 해당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저당 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 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북한동향 제149호)

北韓의 미사일 開發 및 底意 分析

北韓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에 이어 미사일 생산 및 수출을 둘러싼 국제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려의 시발점은 「로동1호」와 「로동2호」로 이 미사일들은 핵 또는 생화학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로동1호는 지난 5월 29일 함경북도 화대郡의 노동발사대에서 동해쪽으로 다른 2발의 미사일과 함께 시험 발사됐다.

이때 발사된 미사일은 「로동1호」로 명명된 스커드D와 스커드C 및 스커드B 미사일 각 1발이었고 거의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명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시험발사에서 「로동1호」는 5백50km 밖에 날지 않았음에도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명중돼 서방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이 「로동1호」의 최대 사정거리는 1천3백km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東京의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로동1호 개발에 성공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고 지난 14일 日本을 방문한 칼루치 美 국무차관보도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다.

이에 앞서 日本의 시사주간지 文春은 지난 9일자에서 『로동1호는 이미 18기가 완성됐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

고 日本의 또다른 한 군사전문가는 『로동1호의 생산에는 일부 일본 전자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도 있다』고 폭로했다.

「로동2호」는 현재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하원 외무위원회 국제안보, 국제기구, 인권소위원회에 최근 제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로동2호」의 사정거리는 1천5백~2천km이고 오는 '95년 이후에 생산을 시작해 '98년까지는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로동2호」미사일은 스커드 계열의 E형에 해당하는데 美하원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 조셉·버뮤데즈씨는 미사일 확산 국가로 中國과 北韓을 지목하고 이들 두나라가 中東에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들을 인도해 미사일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 '7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

이 보고서는 또 일부 소식통을 인용, 北韓이 한반도 전체와 中國·日本·러시아·대만 일부 지역까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스커드D 미사일을 더욱 발전시켜 로동2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 미사일 디자이너들의 북한여행 금지조치가 로동2호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소개했다.

北韓이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부터 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中國이 DF-61로 명명된 전술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면서 부터였는데 中國이 결국 대내외적인 여러가지 사정으로 '78년 이 미사일의 개발 계획이 어렵게 되자 北韓이 자체 고유모델

개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시 北韓은 미사일을 개발할 만한 자체의 기술인력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못해 이를 극복키 위해 이집트와 탄도 미사일 개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과 발사대를 인도받기 위해서 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84년 경에는 소련의 미사일을 그대로 모방한 자체 스커드B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美하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어 중반들어 北韓의 미사일 개발계획은 「착실한 진척」을 보였고 이란-이라크戰 때에는 이란정부와 미사일 기술을 상호·교환키로 하는 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란이 北韓의 미사일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北韓이 만든 스커드B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협정의 주요내용이었다.

'86년에는 1백% 독자적인 생산단계로 까지 발전, 오히려 개발모델인 소련제 스커드B의 사정거리(2백80km)보다 15% 가량이나 더 나가는 3백20km를 개발했고 이듬해인 '87년 7월 이란에 처음 미사일을 인도했다.

北韓은 이뒤 '88년 2월초까지 1백여기를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사일 개발 진전에 때맞춰 '86년에 미사일 부대를 창설했고 '88년에는 미사일 연대로, '91년에는 미사일 여단으로 확대·편성했다.

◇ 對南위협 뿐 아니라 東北亞 정세에도 악영향 필연

이같은 北韓의 미사일 개발연구는 '80년대 후반들어 두갈래 양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스커드B 미사일을 일부 개량한 것이 그 한쪽이고 또 한쪽으로는 스커드B 미사일을 완전히 뜯어고쳐 보다 정교하면서도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미사일 양분 개발양상은 단기적으로는 이란 등의 미사일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미사일을 개발, 군사력강화와 함께 국제 무기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北韓의 이 전략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커드C로 명명된 스커드B 미사일 일부 개량형의 경우 '91년 이란에 1백기가 인도됐고 또 인도, 시리아와의 판매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또 「로동1호」로 명명된 완전개량형의 스커드D도 이란·시리아가 완제품 구입은 물론 심지어 기술을 도입해 자체 생산할 복안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韓의 「로동1호」 및 「로동2호」 등 미사일개발은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사력 강화 및 「외화벌이」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로동1호」 및 「로동2호」 등은 對南공격력을 크게 강화시켜 준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 14일 로버트 리스카시 前주한미군사령관이 北韓의 핵무기 개발야욕과 신형 장거

리 스커드미사일 실험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카시 前 사령관은 이날 1천5백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이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감으로써 첩보위성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뒤 즉각 對미사일 요격기를 동원해도 이를 격추시키기 어렵게 됐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로동2호」 미사일의 경우 한반도 전역은 물론 日本의 東京과 니이카다 및 오사카 등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東北亞정세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재무장의 길로 들어선 日本에 「군국주의화」의 명분을 주어 日本의 군사대국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극우주의자들의 이른바 「대동아공영권구상」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北韓 미사일 개발 현황

(美의회 보고서)

	DF-61	스커드B	스커드A	스커드B	스커드C	스커드D	스커드E
		(R-17E)	(개량형)	(개량형)	(개량형)	(로동1호)	(로동2호)
사정거리 (km)	600	280~300	280~300	320~340	500	1,000~ 1,300	1,500~ 2,000
탄두(kg)	1,000	1,000	1,000	1,000	700~800	800	?
생산연도		1981	1984	1985	1989	1993	1995

(내외통신 제866호)

北韓의 第48次 UN總會 基調演說 內容分析

概 要

- 북한의 송원호 외교부 부부장은 10. 5 제48차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핵문제의 북·미간 해결”,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본 진출 반대” 등을 주장하였음.

〈 演 說 要 旨 〉

【 平和協定 締結 】

- 朝鮮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꿈으로써만 핵문제 해결과 남북적대관계 해소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할 수 있음.
- UN은 제30차 총회 결의대로 남조선에서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적 결단을 내려야 함.

【 北韓 核問題 】

- 우리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핵사찰도 반대하지 않음.
- 제37차 IAEA 총회의 對北 決議는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저해하고 우리 共和國을 압살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임.
- 핵문제는 朝·美 會談이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와 미

국간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문제임.

- 핵문제 해결에 초보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조·미 회담 등 협상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임.
- 核 불사용 보장, 경수로 기술 지원 등 『조·미 회담』 합의사항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의 전망이 열리고 조·미 관계개선의 기초가 마련될 것임.
- 전체 유엔 성원국들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고무해주고 조·미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협력해 주리라 기대함.

【核武器 撤廢 및 外國軍隊 撤收】

- 우리는 핵실험의 영원한 중지와 함께 각종 핵무기를 철폐하는 획기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며 특히 朝鮮半島와 그 주변에 배치된 핵무기들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우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외국의 모든 군사 기지들을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무조건 철수할 것을 주장함.

【UN 安保理 改編】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포함되는 것은 말도 안되며 UN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원국 수에 부합되게 제3세계 나라들이 포함되어야 함.

分 析

- 북한은 이번 총회에 지난해 제47차 총회(金永南 외교부장 참석)와는 달리 외교부 부부장을 참석시키고, 주한미군 철수 등 매년 제기해 오던 상투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核問題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는데 주력하였음.
-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 이 문제가 北韓・美國 문제라고 강변하면서 『朝・美間 회담을 통해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 3단계 북한・미국회담 개최의 當爲性을 강조하는 한편
 - 북한・미국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UN의 역할을 촉구, UN에 의한 對北制裁를 간접적으로 모면코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었으며
 - 제37차 IAEA 총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북한을 압살하려는 政治的 陰謀로 비난함으로써 IAEA 특별사찰에 대한 거부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 국제적 대북 비판 여론을 의식,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핵사찰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IAEA와의 협상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하였음.
- 한편 『주한 UN 사령부 해체』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장은 매년 UN 총회시 既 提起해온 내용이며,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입장 표명도 그동안 북한 보도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항임.

- 북한은 이번 UN 총회 연설을 통해 핵문제에 대해 IAEA와의 협상보다도 이를 『북한·미국간 문제』로 압축시키려는 기존 입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음.

(북한동향 제145호)

特

輯

- 韓完相 副總理, 관훈클럽 討論會 基調演說文
및 질의·답변내용('93. 10. 26)

韓完相 副總理, 관훈클럽 討論會 基調演說文 및 질의·답변내용('93. 10. 26)

(기조연설문)

59차 관훈토론회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견해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기전에 “새 역사, 새 정부 그리고 통일”이란 제목으로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격변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현위치에 통일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축(軸)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그마한 가지의 변화가 아니고 뿌리의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 10년전에 냉전체제가 그토록 빨리 해체되리라고 예측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축의 변화로서의 냉전체제 해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구미(歐美)중심 문화권에 대한 비구미(非歐美) 문명권의 대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년 가까이 구미중심의 세계는 구미의 민족국가(Nation State)를 단위로 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지역의 민족국가가 세계사의 動因(mover)이나 독립변수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1917년 불세비키혁명 이후에는 넓은 의미에서 서방의 민족국가들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세계와 역사를 재편해 왔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지나가면서 국가, 계급,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변수 못지않게 민족, 종교, 문화의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구미 문명권 중에는 이슬람 문화권도 있고, 힌두, 불교 문화권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교문화권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한반도, 일본이 자리잡고 있는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에서 큰 몫을 담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중심으로 이 지역을 Far East, 곧 극동의 변방으로 보았던 시각은 지금 교정될 수 밖에 없는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변방으로서의 극동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중심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을 이와 같은 유교 문화권의 강세의 조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이 아세아와 태평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기초위에서 펼쳐졌고, 미국의 무역균형이 동쪽으로 기울어지는 분기점이 바로 1985년입니다. 다시말해 미국의 유럽에 대한 무역총량보다 아세아 쪽에 대한 무역총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분기점이 1985년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균형이 동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지역이 새로운 경제블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유교문화권 안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은 그 잠재능력이 이미 꽃피고 있습니다. 중국은 긴 잠에서 깨어나서

시장경제체제로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민족단위로 볼 때 아직도 분단된 채 그 귀한 자원을 국방과 경제로 양분해야만 될 그런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한반도의 남쪽인 우리 한국은 경제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이미 정치적 선진국으로 향진하고 있습니다만, 북은 그 독특한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때문에 정치·경제적 개혁과 발전은 커녕, 체제위기속에서 불안정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냉전체제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면서 민족중심으로 또는 종교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강제력 때문에 억울하게 분단된 채 살아야만 했던 민족들은 냉전체제가 해체됨으로써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과 예멘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냉전체제의 강제력 때문에 강제로 통합되었던 민족들은 반대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고슬라비아 사태라든지 구소련의 해체과정에서 이러한 조짐을 뚜렷하게 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냉전체제로 인해서 분단되어서는 안되는, 통일되어야만 하는 민족들이 냉전체제 해체과정에서 합쳐지고 있는데 유독 한반도만은 아직도 합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구미 문명권 중에서도 유교문화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역사 흐름속에서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외적인 현상은 오래 가기가 힘들습니다. 세계사적 큰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은 오래 전디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한 몇년 됐습니다만, 막스 싱거(Max Singer)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분석해서 21세기 중반이후 세계 8대 부유국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8대 부유국 가운데 2등이 한반도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통일된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1등은 일본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가 미국, 네번째가 독일, 다섯번째가 프랑스, 여섯번째가 이태리, 일곱번째가 영국, 그리고 마지막 여덟번째가 소련입니다. 그분의 A Passage to the Human World라는 책은 '89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 때는 소련이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동북아지역의 일본, 한반도가 이렇게 1, 2등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경제부유국이 된다고 막스 싱거 박사가 예측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반도라고 하면서 통일된 경우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흐름에 맞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아직도 분단상태에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세계사의 흐름이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 가운데 신 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걸고 김영삼정부는 출범했습니다. 냉전이후 시대를 열기위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영삼 정부의 새로운 개혁의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80년대 우리사회 일부에 품기했던 계급이데올로기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변혁이 좌절됐다고 하는 최근의 경험을 주목해야 됩니다. 밑으로부터 혁명이 실제로 좌절되면서 '90년대 들어와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역사적으로 요청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윗물맑기 운동, 다시말해 위로부터의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사정단계

를 거치면서 제도개혁단계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려면 아랫물 맑기운동, 즉 국민운동과 접합이 되어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윗물 맑기운동이 사정과 제도개혁과 더불어 총체적 개혁으로 나아갈 때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문화 각 방면의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 성공의 기초위에서 통일역량은 비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지표 4가지 가운데 첫번째는 정치적인 개혁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경제적인 개혁에 관한 지표이며, 세번째가 사회적인 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가지 개혁의 성공을 통해 마지막이 통일된 조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역량의 강화는 국내개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개혁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정부는 단계론적 통일론, 그리고 3기조론을 중심으로 평화시의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론은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서 남북연합단계를 지나고, 마침내 1민족 1국가의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3기조는 국민합의, 공존공영, 그리고 민족복리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정부의 통일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평화적인 상태에서 신정부가 추진하려는 통일정책이 핵문제로 인해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핵문제에 대해서 정

부는 4가지 정책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핵우선 해결의 원칙, 둘째는 핵문제 해결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평화와 대화의 원칙, 그리고 세번째는 핵문제를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해결한다고 하는 국제공조의 원칙, 그리고 네번째는 북한의 핵지연전술을 저지한다고 하는 지침을 가지고 오늘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원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핵문제를 오늘까지 카드화해서 끌고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 냉전해체 과정에서 파생된 국제적 고립과, 그것에 유기적으로 연관된 경제적 곤경— 이것이 체제의 위협을 가져오고, 이 체제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북한당국은 인식한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북한이 어떻게 미국같이 큰 나라를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미국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 북한당국은 면밀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탈냉전 이후에 미국은 global hegemony strategy로서 핵비확산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북한은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NPT탈퇴선언 이후 오늘까지 그들은 핵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핵에 대한 정책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핵없는 한반도는 핵있는 한반도보다도 안전합니다. 핵없는 통일은 핵있는 통일보다도 더 바람직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핵문제와 관계되는 몇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남북대화에 임한다면 우리는 핵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며, 또한 남북사이의 다양한 경제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말씀을 적극 구현·실천하는 차원에서 우선 현재 진행중인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토의를 마무리 짓고, 특사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사교환 문제를 제4차 실무대표접촉(11. 4)에서 매듭짓고, 11월중에 남북특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사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최고위급의 의사가 원활히 소통됨으로써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사이의 현안문제들이 타결되고 평화통일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그들의 체제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일에 더욱 성의있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이전에 이미 남북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의 이행은 물론 서울·평양간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같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을 자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북한측은 하루빨리 핵무기개발 의혹의 어두운 장막을 거두어 올리고 남북대화에 책임있고 성실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는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중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일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로 부터 냉엄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북한당국은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이 통일되어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면, 한국은 유교문화권의 핵심지역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극동아닌 본동(本東)의 한가운데서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러한 웅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릴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답변내용)

○ 사회 (李光勳 총무)

지금부터 패널리스트 네 분의 질문과 한부총리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토론회에 자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은 1분이고 답변은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3당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시에는 한 40건의 질문·답변이 있었습디만 배경설명은 가능하면 생략하시고 단문단답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석자 분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탁상위에 있는 질문지에다 적어서 주시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金正瑞위원부터 시작을 해주시지요.

○ 金正瑞 (동아일보 논설위원)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3차 접촉이 있었는데 그 접촉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 4차 접촉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서는 남북특사교환에 관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접촉은 미국과 북한의 고위회담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사교환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데, 조금전에 부총리께서는 특사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최고위급의 의사가 원활히 소통됨으로써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사이의 현안문제들이 타결되고 평화통일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우선 어제 이루어졌던 3차 접촉이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절차문제를 북쪽에서 정식으로 거론했다는 의미에서는 진전인데 아직도 그들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무접촉의 과정을 거쳐서 특사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특사수준에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 돌파구는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것은 첫째, 김영삼 대통령께서 핵문제 우선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특사를 통해서 전달될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남북특사교환은 미국이나 IAEA도 바라는 것이고, 핵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러 나라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특사교환은 단순히 남북 두 국가간의 교환이라고 하기 보다는 세계적인 관심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원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가 실린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저는 핵문제 해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반도비핵화 선언의 이행문제가 특사교환을 통해서 당연히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부총리께서는 방금 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였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특사교환 문제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북한이 기존의 고위급회담을 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사교환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측이 처음에는 안받아들일 것 같다가 받아들이니까 북한측은 또 이 핑계 저 핑

제를 대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기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측이 3차 북·미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특사교환 문제를 집어넣으니까 할 수 없이 저쪽에서 하자고 해서 지금 거의 특사교환이 성사될 단계에 왔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기조연설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 북한이 노린 것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핵개발이라는 것을 카드로 내세워서, 우리를 상대로 한다기 보다는 상대를 미국에만 두고 우리는 거기에 들러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어제 접촉에서도 특사교환 하자 하는 데에는 합의가 됐지만 그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특사교환을 하면 우리가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등을 저쪽에 약속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줄 것만 다 주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지금 蔣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사교환 문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종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의제로 봐서도 아직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신이나서 우리와 특사교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들이 가장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비록

줄겁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체제유지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필요한 목적, 즉 생존이라는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 특사교환에서 적어도 남북상호사찰을 위한 분위기 조성까지는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 것만 주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대화, 곧 아주 극단적인 손실을 보는 대화라면 그것은 염려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지난 7월달에 제2단계 미·북 회담 직후에 발표된 미국측의 성명에 의하면 3단계 회담은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남북한간의 회담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직후에 韓장관계서 인터뷰에 응하셔서 하신 말씀중에는 아마 북한이 두 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두 달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두 달 안으로 틀림없이 받아들이고 말 것이다 하는 낙관적인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사태의 진전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사찰은 커녕 지금 진행중에 있는 감시카메라의 교체나 밧데리, 필름의 교체까지도 저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별사찰의 수용이 아니라 그런 통상적인 사찰의 수용을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식으로 전략적인 목표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특사회담을 하는 것을 큰 진전으로 여길 정

도로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축소했는데 이런 판단의 착오에 대해서 韓장관님께서 좀 분명하게 해명을 하신 다음에 이 특사회담의 희망적인 관측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아마 월간조선에서 趙부장하고 대담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때 미국과 북한의 2단계 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두가지 조건을 이야기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달이라고 하는 시한에 대한 우리측의 해석은 그 안에(2개월)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대는 핵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되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사태는 기대가 충족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잦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굴러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지만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북한간에 그 시한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속도가 빗나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기대치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남북 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또 그런식으로 하지 않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날의 경험으로 봐서 결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대로 절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그러한 행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 楊澈訓 (sbs기자)

특사교환과 함께 관련있는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우리 정부가 특사교환을 성사시키는 대신 우리 측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선언할 것이다 하는 추측보도가 여러번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측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 여부를 한국정부가 알아서 판단해라—그렇게 결정권을 완전히 이양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실무회담에서도 공식회담을 마치고 우리 송영대차관과 북측 박영수대표가 막후 접촉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끝나고나서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주로 오고갔을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막후 접촉의 내용,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질문하시는 분을 도와주지 못하는 저 자신의 입장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楊澈訓기자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할 수 있다면 핵문제의 진전이 있으면 T/S문제는 신축성있게 대처한다 라는 원칙만을 다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그 원칙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은 비공식접촉에서 오고 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楊澈訓 (sbs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실 때 남북대화에 북측이 책임있고 성실하게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막후 접촉에서 일단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문제를 우리가 북측에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앞에서 말한 그 원칙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金正瑞 (동아일보 논설위원)

특사교환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만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거쳐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특사교환이 잘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하셨는데, 북한은 이 핵문제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국제원자력기구를 완전히 제쳐놓고 미국하고만 담판하겠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IAEA 뿐만 아니라 역시 한국

도 대화의 상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사이에 특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미·북한 제3차 고위회담을 열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서 핵문제를 실속있게 다루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가 될 뿐 남북 특사교환에서 무슨 알맹이 있는 이야기가 과연 오고갈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지금 金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북한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AEA와는 공정성 문제로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핵문제는 미국과 직접 해결하고 싶은 것이 북한당국의 의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보다 중요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비록 특사교환이 형식요건적인 의미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핵문제 해결의 3가지 조건 가운데 마지막 조건이 뭐냐하면 남북상호사찰입니다.

남북 상호사찰이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이 안되면 핵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상호사찰을 누가 합니까? 남북 당국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남쪽을 소의

시키거나 남북대화 자체의 중요성을 격하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특사교환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읽을 있습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취임한 후에 몇번 곤욕도 치르시고 하셨지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또 앞으로 남북관계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과는 반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좀 빗나가는 것 같고, 점점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북한이 심하게 말하면 미국하고 우리를 자기들 의도대로 가지고 놀고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어떤 원칙에는 강하지만 때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약속도 파기하고 하는 그런 북한과의 협상경험이 별로 없는 데다가, 또 통일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총리의 상당히 유화적인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문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채찍과 당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좀더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체찍과 당근을 함께 쓰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같은 정부의 입장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부서가 체찍도 썼다가 당근도 썼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일원은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를 같은 조건하에서라면 개선하는 쪽을 택하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통일안보와 유관되는 다른 부서와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원은 같은 조건이라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밝게 보고, 유화적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정부의 다른 부서는 보다 강경하게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부내에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가 어제는 강경 오늘은 유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통일원의 입장을 유화책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화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유화책하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화책은 이틀테면 『햇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풍을 불어서 그 옷을 벗길수만 있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갖고 있는 특수한 조건들,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독특한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특성에 주목할 때 과연 강경일방적인 제재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볼 때 유화책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화책 이외에도 다른 강경책을 쓸 수 있는 정부내 기구가 있다면 협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시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결코 낙관하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무조건 낙관하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희망과 현실의 격차가 있을 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만약 유화책과 강경책이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우리 통일원은 유화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효과가 아니고 유화책은 20%밖에 효과가 안나오고 강경책이 80%의 효과를 낸다면 핵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강경책을 왜 안쓰겠습니까?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원이 유화책이면 강경책을 쓰는 데는 청와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통일과 안보라고 하는 두 축이 있을 때 같은 문제를 안보차원에서 보면 만에 하나 실수가 국가전체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기부같은 부서인데 안기부의 신중론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 항상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원장관이 입만 열면 강경책만을 이야기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선택을 다 활용했어도 안될 때 강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서 비로소 강경책을 써야 강경책이 명분을 갖게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option을 갖고 있을 때 최소한 우리는 인내하면서 유화적 선택을 전부 다 소진한 후 강경책을 쓰면 그 강경책의 명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조금전에 기조연설 하신 내용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이전에 이미 쌍방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 이행은 물론 서울·평양간 상주연락대표부 설치와 같은 남북관계정상화에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하고 북한과의 수교회담에 지금 이 내용을 조건으로 내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미국하고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하기전에 서울·평양간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전제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제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것이 기사화가 되면 미국은 우리의 뜻이 무엇이라

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전제조건이라는 말을 내걸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때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agenda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楊澈訓 (sbs기자)

지금 특사얘기가 나왔으니까 특사와 관련있는 정상회담 부분을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금년 내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꺼냈다가 구설수에 올랐고, 그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졌고 발언을 삼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이나 12월쯤 아마도 특사교환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특사의 임무 5개를 든 것 가운데 하나로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특사교환이 가까운 시일안에 성사가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빠르면 내년 초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시 말해서 특사교환이 성사가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특사교환이 된다는 전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전제는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입니다.

핵문제 해결이 된다면 남북관계는 아주 괄목할 정도로 진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은 순리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나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개선되면 그 흐름에 따라서 남북 정상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楊澈訓 (sbs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경험을 재개하겠다, 또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은 남북한 상호사찰이 실시되는 단계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핵문제 해결의 분위기라면 어느 정도까지가 핵문제 해결이 되는 단계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그것은 세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입니다. 이를테면 경제인의 방북은 북한이 NPT체제에 잔류하고, IAEA의 실질적인 사찰을 받고, 남북 상호사찰을 받는 세가지 조건 가운데 첫째와 두번째의 조건이 만족될 때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두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金正瑞 (동아일보 논설위원)

북한에 대한 유화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상당히 신축성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정부에 들어가신지도 8개월이 됐습니다만, 일부 보도로는 그 동안에 부총리의 진보적인 성향이 일부 후퇴하고 현실론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사람을 진보다 보수다 하는 범주속에 가두어두는 그 자체를 저는 잘못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생물체와 같이 살아있어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언제나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유연성있게 그것이 발전합니다. 물론 후퇴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시점에 어떤 사람의 생각을 진보다 혹은 보수다 하는 범주에 가두어 두었다가 석방을 안시키면 환경은 변했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그를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진보가 무슨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정치에 있어서 지난 날 권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해서, 정권의 권력 도덕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체제가 민주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의미를 진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뜻에서 진보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변한 것이 없고, 다만 사태 발전의 추이에 따라서 보다 신축성있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진보에서 보수로 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진보, 보수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면 야당이 오히려 부총리편을 드는 것 같고, 통일원장관까지 지낸 분이 포함되어 있는 여당 의원들이 부총리를 상당히 공박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결들여서 최근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정부 내부에서나 아니면 친정부적인 계층에서 까지도 부총리의 대북정책을 상당히 강력한 톤으로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우리 정부정책에는 무조건 시비만 해오던 북한까지도 지난번에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의하면서 부총리를 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부총리를 상당히 좋게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정부정책에 별 문제가 없다면 부총리 개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다시 말해서 부총리께서 통일정책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직에 계시면서도 아직도 생각이나 행동이나, 과거 재야나 아니면 학교에 계실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재야인사나 아니면 북한이 부총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제가 교수로 있었고 재야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존적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지금 부총리가 되고 통일원장관이 됐다고 해서 재야시절에 생각했던 것이라든지 그런 삶의 양태라든지 사고방식이 변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사실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가 변했다고 해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혹시 재야에 있을 때 생각이 통일원장관이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오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공직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알지 않으려고 발버둥쳐도 매일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보고 받기 때문에 아마 질문하시는 선생님 보다는 북한의 실상을 더 많이 알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냉혹하게 북한 현실을 알 수 밖에 없습

니다. 또 저는 학자로 있을 때 천문학자가 아니었고, 미생물학자도 아니었고 정치사회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리가 돼서 북한의 현실을 보고받고, 또 여러가지 소오스를 통해서 듣고, 사회과학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합리적으로 냉엄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유효한 접근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재야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말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나 교우관계에 있어서 재야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점은 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국회에서 여당이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고 야당이 도와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태동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야의 시각에서 저를 보시지 마시고 남북관계 개선,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세계사가 어떻게 흐른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의 언행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말을 아끼라는 충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신 정부의 통일정책을 국민합의 도출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끌고 갈 때 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훈클럽에도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좋은 뜻에서 말을 하는 것도 아끼려고 한다면 여기에 만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이것이 신 정부의 정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공적업무에 관계되는 말까지 아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내 자랑을 한다든지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의하면 1955년 이후에 북한에 납북돼서 아직 귀환하지 못한 어부가 4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87년에 납북된 동진호 선원이 12명입니다.

동진호 선원 어로장 부인되는 분을 韓부총리께서 부산까지 내려가셔서 만나서 눈시울까지 붉힌 일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만, 그 때 아마 곧 동진호 선원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3월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韓부총리께서는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시고 북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성명이나 행동에 의해서 북한에 납북어부를 돌려보내라는 이야기는 아직 한번도 안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밀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비밀 접촉을 통해서 남북어부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그간 趙부장님이 아시다시피 남북간에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할 수는 없었지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여러 계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경축사라든지 중요한 말씀 기회를 통해서, 또 저 자신이 지난 추석때 이산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라든지, 또 제3국에서 그쪽 사람들을 만나는 회합같은 기회에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촉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간 사실도 보도를 통해 북한측에 우리 입장을 간접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판문점 면회소, 그것도 안되면 제3국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면회소를 설치하자고 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저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접촉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만약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고 사회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밀접촉이 아닌 공개적인 강력한 정부의 성명이 되풀이 되어서 나와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달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오길남씨가 북한에 남기고 온 세가족, 자기 부인과 두 딸— 오길남씨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청중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다면, 오길남씨는 독일에서 민주화투쟁을 하다가 1985년에 북한에 경제학자로 일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북한에 갔으나 북한에서 이 사람을 대남방송원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을 느껴서 1986년에 덴마크로 나와서 망명을 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올 때 가족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 뒤에 귀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가족은 요덕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됐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사람에 대해서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양심수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을 하라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오길남씨 가족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북한에 대한 요구를 표명한 것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건이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우리 정부도, 말하자면 북한이 이인모 노인에 대해서 기울였던 관심정도로 이 세사람에 대해서 북한에 구체적인 요구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오길남씨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물으신 방식으로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楊澈訓 (sbs기자)

이산가족 얘기가 나왔고 이인모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에 대한 평가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인모 노인의 송환문제인데 아직도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했다, 잘못했다, 우리만 손해를 봤다, 얻어낸 것이 없다고 하는 여러가지 지적이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부총리께서는 아직도 그 당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와 함께 얼마전에 북한에서 함세환과 김국홍이라는 두 노인, 이인모 노인하고 거의 똑같은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두 노인에 대한 송환요구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인모 노인과 같은 경우인데 보내지 않으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인모 노인의 송환 허용은 신 정부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는 이만큼 줘야 한다는 당장의 손익계산의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인모 노인 보낸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이인모를 보냄으로써 북한당국도 신 정부 정책의 도덕적인 성격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월간조선 11월호에 인민군 중위 임영선씨가 쓴 글인지 대담인지 읽어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사회같으면 이인모같은 사람을 모두 죽였을 것이며, 하지만 남한은 감옥에서도 돌봐주고 결국 고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남한사회는 북한사회와 다르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만약 임영선씨가 한 말이 그 현실에서 사실이라면 이인모 노인을 보낸 도덕적 결단이 저쪽 체제와 다른 새 정부의 인도주의의 정신이 구현된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불구하고』의 논리를 가지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몇 달간의 짧은 시간에 잃은 것이 얼마나 라는 차원보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正瑞 (동아일보 논설위원)

지금 남북어부 송환문제라든가 이인모 노인 송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평화통일안의 제1단계는 남북교류협력의 실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적교류, 물적교류, 그리고 경제교류를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1천만 이산가족 문제는 제기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서신교환은 말할 것도 없고 상봉, 자유왕래 이런 것은 전혀 진전을 못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그러니까 북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아시다시피 현 단계에서는 핵문제에 걸려서 제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도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교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역은 지금까지 약 1억 5,000만불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적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북한당국이 인적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산가족간의 상봉은 물론, 이산가족 노부모의 방북도 허용하지 않는 북한측의 태도를 볼 때 인적교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것이 없는 것 같고, 게다가 핵문제가 있어서 이 부문에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면 여러가지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

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단계 통일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시에 모든 계획대로 될 때에 가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핵문제라는 돌발문제에 걸려서 계획대로 가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이런 상태로 봐서 아마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3단계론 보다는 오히려 북한 내부의 돌발사태, 또는 외부여건의 급격한 변화—이런 데에서 통일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물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 등으로 해서 북한 내부에 어떤 돌발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관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돌발사태에 의한 북한의 체제변화에 따른 통일가능성이 얼마나 클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추정 가능한 다음 체제는 김정일 체제인데, 우리한테는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아주 못됐고,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합리적일 것이다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 과연 우리 통일에 호재가 될 것인지 악재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지금 북한의 형편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 같은 것도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발사태 가능성이 더 증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 시점으로 봐서 북한의 내부분제는 결코 낙관할만큼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수치를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식량사정도 어렵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원유도 옛날같지 않고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폐쇄가 됐다 하더라도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을 접하면서 중국사회와 자기들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심리적인,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돌발사태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발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성격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설이 맞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그가 아버지보다는 카리스마가 적다는 것은 사실이고, 카리스마가 적다는 것은 장악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권력승계가 김정일한테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집권을 한다고 하면 당분간은 남북관계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돌발사태가 거기 겹쳐졌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발상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애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과연 그런 기미가 부총리한테 보이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여러가지 첩보들이 있고 정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다면 북한체제는 여러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발사태나 해체로 가는 구조적인 모순들을 몇가지만 든다면, 대내적으로는 체제결속을 더욱 굳게 다지면서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어야 될 필요성과, 또 열면 위협이 오기 때문에 닫고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 두 개간의 모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이 두개간의 모순인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모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참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경제는 신장시켜야 되는데 동시에 군사력도 강화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체제위기가 심화되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해소수단과 위기심화와의 관계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체제위기를 해소하려면 인사쇄신 등의 정책전환을 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는지, 체제를 개혁해야 된다

든지 이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모순이 중첩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상황에서도 이런 모순이 중첩되어 있고 심화되어 사회는 견디기 어려운데, 국제적인 고립이 가중되고 게다가 핵문제마저 중첩되어 있어서 돌발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남북한간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유일하게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흡수통일 반대론입니다. 북한에서는 먹고 먹히는 흡수통일에는 반대한다고 했고, 우리도 韓부총리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흡수통일에는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韓부총리께서는 흡수통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피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중에 당장의 흡수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북한체제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원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정도로 양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흡수통일 반대론을 우리 정부당국자가 공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언한다면 정확한 표현을 써가지고 당장의 흡수통일은 반대한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韓부총리께서 계속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의 최종적인 방향과 정부에서 흡수통일 반대다 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면 여기서 바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부가 말하는 단계적 통일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국민들이 오히려 그것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흡수통일 반대론을 정부 당국자가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국민들이 말장난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점진적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3/4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과 같이 단기적인 짧은 시간에 한쪽이 다른 쪽으로 흡수되는 것을 흡수통일이라고 불러야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을 꼭 흡수라고 하는 공격적인 용어를 써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는 흡수통일은 단기적인 체제

통합으로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그것은 각자가 자유롭게 생각하시되 정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강요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楊澈訓 (sbs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질문자들이 질문한 대로 국민들 가운데는 상당부분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돼서 통일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브란트 전 수상마저도 통일이 되기 불가 4개월전에 독일이 급세기 안에 통일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돼서 통일이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현 시점에서 단계적인 통일과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의한 통일가운데 어느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지금 당장 이 시점이야 단계론적인 통일의 가능성이 더 크지요. 또 정부는 갖고 있는 재원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동서독 통일에서 보다시피 단기적으로 흡수통일 되는 경우에 갖는 엄청난 비용,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립니다만, 지금 통합된 독일이 겪고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심리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큼니다.

남한은 아시아의 서독이 아니고 북한은 아시아의 동독이 아닙니다. 동독은 그래도 붕괴되기 전에 사회주의권에서 제일 잘 살았던 나라이고, 서독은 자본주의 자유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중의 하나였는데 동서독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가지로 불리하고, 또 남북관계 현안을 보더라도 그쪽은 텔레비전 등을 통해 상당기간 상대방 실상에 익숙해 온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정보교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독일식의 흡수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엄청날 것이며,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점진적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평화적인 통일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金正瑞 (동아일보 논설위원)

좀 돌출적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은 북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4공동성명이라든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등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의미부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북한은 휴전협정에 따른 군사 정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한국군 장성이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자마자 일체의 본회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도 한국의 사회단체 라든가 학생단체 등을 상대로 대화를 꾀하는 등 상당히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공공연히 내보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북한과 과연 우리가 대화를 해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내외의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화해야 할 형편에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오히려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진리 같습니다만, 대화하기가 참 어려울 때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金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대화에 대한 북한의 자세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통일전선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기조연설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금 남북간의 긴장 관계라고 하는 것은 냉전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사의 호

름에서 보면 예외나 비정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도 마련하고 통일의 기회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계속해 나가야 할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조금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일후의 독일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한가지는, 남북하고 달리 동서독간에는 통일이전에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을 하고 보니 가장 어려운 것이 동서독이 서로를 너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아마 제대로 말이 통하려면 앞으로 30년내지 50년 지나야 서로를 알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최근에 내외통신에 의한 북한 보도들은 우리가 금년에 홍작이 돼서 굶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 나오고, 또 우리쪽에서 볼 때는 최근 북한 TV를 선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북한을 제대로 안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핵문제니, 여러가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된다면 인적교류를 하고 상호방문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는 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신문같은 인쇄매체, TV, 라디오 같은 전파미디어를 상호 개방하는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개방, 완전개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동서독 경우에 견주어 볼때 우리는 동질성회복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정치적으로 통일이 됐지만 두 개의 사회, 두 개의 시민, 두 개의 백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심리적인 장벽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동서독 경우는 '70년초부터 서로 텔레비전을 개방한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북쪽이 우리에게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고, 북한은 남한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고려할 때 1단계인 교류협력단계에서는 만약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경제·문화·사회 각 분야에서 동질성회복의 프로그램들이 아주 팔목할 정도로 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경제문제 같은 것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경제교류, 협력하는 것을 터주고, 또 문화·사회적인 면에서도 터주고, 그 정책에 따라 라디오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나 전파매체의 공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당국은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전파매체가 끼친 역교혼을 굉장히 깊이 명

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우기 이 단계에서는 핵문제가 있으니까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경제협력을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바로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하는데 있어서 안심하고 문을 열수 있도록 다자간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미국을 참여시키고 북한을 참여시켜서 북한을 안심시켜야 된다. 또 두만강개발 계획과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북한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논의가 더 진전돼서 지난 9월말에 용평에서 있었던 동북아 경제협력 포럼에서는 참석한 여러나라 대표들이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 동북아개발은행에 북한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협력 틀의 공통점은 미국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 혹시 우리 정부에서 이런 다자간 안보 기구나 다자간 경제협력 틀, 북한을 포함시키는 또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그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핵투명성 보장, 혹은 핵문제 해결이 될 때 이런 다자간의 협력체제를 통해서 북한경제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검토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하는 차원에서 다자간의 이런 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은 우리 통일원보다는 외무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결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최근에 김대중 전민주당대표의 말씀이 이런 다자간 기구같은 것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한미군인데 북한은 주한미군의 잔류를 허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주한미군의 잔류를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미국측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을 미국의 고위당국자한테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 楊澈訓 (sbs기자)

방금전에 경협 얘기가 나왔고, 부총리께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간에 요즘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중의 하나가 핵과 경협의 연계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핵문제에 매달리는 사이에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시장을 선점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정부는 북한이 NPT에 완전히 복귀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면 경협을 재개한다고 원칙을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 만약에 특사교환이 성사가 되면 핵과 경협의 연계정책을 좀 수정해서 보다 일찍 경협을 재개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으신지? 다시 말해서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 전면적인 경협재개 이전 단계로서 기업인의 북한방문 정도는 허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우리가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특사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돌파구 마련의 조건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 사회 (李光勳 총무)

경과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자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10건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질문의 맥을 끊는 것 같습니다만 일부를 소화하고 계속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부 5건정도를 말씀드리고 대표질문 끝난 뒤에 계속해서 나머지 질문을 다 소화하겠습니다.

기조연설 도입부분은 이번주 타임지의 권말 에세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기독교권 운동의 윤리가 유교권의 그것보다 못하여 서구는 뒤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에세이에 한국 노동자의 근면성, 예를들면 한국 노동자는 출근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공장 마룻바닥에서 잠자고, 서구의 노동자는 근무시간중에 공장 마룻바닥에서 잠을 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하고 다른 얘기도 있기는 한데 상당히 한국의 장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세계 제2위의 부유국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북한이 핵개발 여부를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핵개발에 성공한 다음에 핵무기를 카드로 쓰리라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세번째는 우리 정부는 정책의 최종목표와 교섭방법상의 흥정거리를 혼동해서 카드를 모두 내놓고 있다. 유화적인 접근법으로 국민의 단호한 결의와 태세를 약화시켰다가 북한이 끝내 불응하면 그 때는 국민이 정부의 말을 안듣게 된다. 일전을 불

사한다는 각오없이 평화적 해결은 안될 수도 있다. 일전불사라고 해서 강경책은 아니다.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는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인데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 아까 제가 기초연설 할 때 막스 싱거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21세기 중턱을 넘어서면 남북이 통일된 경우에 한해서 제2의 부유국으로 등장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막스 싱거의 예견치를 말씀드렸는데 역사 전체의 흐름이 지금 비서구 문명권 가운데 유교문명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앞으로 9년 후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리고 일본은 엄청난 경제부유국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관찰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서구권 가운데도 아시아를 보세요. 세계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을 보면,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차지한 메달을 볼 때 거의 90%를 우리 한반도, 중국, 그리고 일본이 차지합니다. 아시아에 설흔 몇개의 나라가 있는데도 이 세 나라가 9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유교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경제블럭이 형성되겠느냐 하는 것을 접어둔다 하더라도 전세계로 봐서 동북아권이 EC와 NAFTA를 빼놓고 경제블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저력있는 지

역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막스 싱거 박사가 말한 2등이나 3등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커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또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교문화권의 핵심에 한반도가 들어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허리가 잘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국운을 상승시키고 신장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남북현안을 미시적으로 보는데서 탈피하여 좀 크게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거 박사 말대로 2등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등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가정할 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협상카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개발의 정도가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서 NCND라고 하는 카드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카드는 무기를 안가지고 있는 단계에도 쓰고 있고, 가지면 더 유용하게 쓸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한반도를 핵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만일 북한의 핵의혹 정도가 높아진다면, 일본의 핵민족주의자들은 핵무장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간에 지금 군사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긴장상태가 고

조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동북아가 저 동쪽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일 때는 그 변방에서 안정이나 평화가 흔들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냉전시대에 새로운 역사의 동인(動因)으로 성장하는 이 지역에서 만일 평화가 위태롭게 되고 안정이 흔들리게 되면 세계평화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세번째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 그것은 북한을 너무 낭만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6.25를 겪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안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일전불사의 의지로 전쟁하자는 겁만 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선택이 소진됐을 때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쓸 정당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태에 갔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李光勳 총무)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짧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남조선 무력해방 정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은 아직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리고 그 견해의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남북연합을 통한 1민족 1국가 통일을 현재의 김일성 김정일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성

취하겠다는 통일목표인지 아니면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전제로 한 통일목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무기의 양적인 면만 보더라도 이 조그마한 반도에 만약 전쟁을 일으킨다면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어떤 점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테면 먹고 먹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흡수통일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군사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두번째로, 3단계 통일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은 상당히 오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류협력, 남북연합, 1민족 1국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각종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질성회복을 촉진하고 신뢰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든지 혹은 복지든지, 민주화든지 서로 교류하면서 남과 북이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 남북연합단계가 되면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뿐만 아니라 제도화가 됩니다. 남북간의

국회의원들도 기구를 통해서 만나고, 각료들도 만나고, 정상들도 만나고, 이러한 만남을 상설화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생깁니다. 또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같은 제도화의 단계에 접어들면 불가피하게 체제의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동서독 경우도 보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촉진한 국제적인 요인가운데 하나가 동독이 유럽안보협력회의에 들어간 점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 반영하려고 하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독이 저렇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해서 1민족 1국가로 간다는 우리의 통일방안은 매 단계마다 보다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유도, 촉진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상정하지 않는 교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서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교류를 하고 협력하고 제도화를 이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 사회 (李光勳 총무)

이번 질문은 언론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의 일부 고위관료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언론의 보수성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 언론의 통일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저는 그 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날 권위주의 시대에 언론은 권력의 피해대상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언론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사회를 관찰해 왔던 학도로서 보면 지난 삼십 몇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4개의 엘리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아시다시피 군부입니다. 군부라고 하는 것은 사병이 아니라 정치 군인을 중심으로 한 군부를 말합니다.

두번째가 경제인 그룹이고, 세번째가 정치인 그룹이고, 네번째가 이 세 집단을 어떤 의미에서 반대해 왔던 학생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동안,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 이 가운데 학생세력이 약화됐습니다. 두번째로 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군부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이 두 그룹의 힘이 약화된 반면에 새로 등장한 힘이 바로 언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언론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동시에 역사와 국민에 대한 언론의 책임은 그만큼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일정책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책에 있어서 힘을 갖게 되는 그룹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신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막강해진 언론이 모든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때는 취하고 개혁적인 입장을 취할 때는 취해주고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통일정책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대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李光勳 총무)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표질문의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대표질문을 계속하고 나서 나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능하면 짧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瑞 (동아일보 논설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북한 핵문제가 지금 최대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이라고 기억됩니다만 북한이 NPT탈퇴선언 후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IAEA, 미국, 전 세계가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에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접촉이 다시 재개되고, 또 예상되기로는 특사교환과 함께, 아니면 그 전후해서 미·북한의 제3차 고위회담도 열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도 북한이 오는 11월 1일 IAEA가 유엔에 제출할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유엔에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단순히 어느 것을 희망하느냐 하면 희망하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을 관찰해 보면 비록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했던 속도와 내용으로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아주 느린 속도로나마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체제위협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길이 미·북한 관계개선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남북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문제도 많은 진전은 아니지만 어제 조그마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IAEA간에도 비록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종의 모양새 갖추기를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진전을 이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을 넘기기 전에 미국과 북한이 3차 회담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간의 3차 회담도 핵문제가 중심이 되고, 핵문제에 국한되는 회담으로 될 것이며, 정치회담은 아닐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우리의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제재 또는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강행해서 핵무기를 갖게 되는 단계에 간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핵개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투명성 보장의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현 단계에서 한 발자국도 더 핵무기 개발쪽으로 못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 상태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대답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우리 뜻대로 가주면 천만다행인데 아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경우 일본은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물론 그런 현실이 오지 않더라도 어떤 계획내지는 기본대비책 같은 것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蔣부장님 아시는 대로 우리 정부, IAEA같은 국제기구, 미국, 혹은 다른 여타의 비확산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나라들까지 북한의 핵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무기개발로 가지 못하

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해서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핵의혹 상태만 가지고도 일본의 핵민족주의자를 자극하는데, 만약 가정해서 북한이 핵무기개발 단계에 갔다면 세계평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제공조체제하에서 우리의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지난 6공화국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 안에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의 권위를 빌려서 일괄적인 타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도 크게 거기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김일성을 상대로 하는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로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해방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단 물러갔던 미국과 중공군이라는 외세까지 불러들인 사람이다. 그리고 북한을 20세기에 유례가 없는 악마적인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민족의 장래를 의논할 수 있느냐 하는 도덕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김일성하고 합의한들 그것이 지켜지겠느냐? 지금 김일성하고 합의할 필요도 없이 남북기본합의서라는 더이상 나올 수 없는 합의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만 하면 되지 또 다른 합의를, 또 다른 집을 하

나 짓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 설사 김일성이 합의한들 과연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겠느냐? 김일성이 몇년 안에 북한주민들에 의해서 타도되고 역사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을 때 거기에 합의해주고 한 우리쪽 정부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1938년에 뮌헨회담에서 영국의 챔벌린이 히틀러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분단에 대한 평화합의를 했습니다만, 1년뒤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챔벌린이 그것때문에 책임지고 실각한 역사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한다든지,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최고위급의 뜻을 잘 반영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의 특사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위급회담이라는 양쪽의 제2인자가 대표로 참여하는 회담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특사회담,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집을 계속 지어가다 보면 합의는 양산하겠지만 그 합의를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효력이 없을 때는 결국 우리 정부가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김일성 생존시에 남북관계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김일성 이후에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

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김일성 생존시에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정상이 만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그쪽의 유일체제적인 성격을 감안한 데서 온 판단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동시가입에서 보다시피 그들의 원칙을 뒤집는 것같이 보이는 그런 큰 결정을 김일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김일성이가 없고 김정일이가 있었을 때 그만한 카리스마가 없는데 이런 큰 결정을 해내겠는가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상회담 형식으로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김일성 생존시에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결단을 하도록 유도해내야 된다는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과거의 행적으로 보나 여러가지로 봐서 김일성을 믿을 수가 없고, 약속해도 안 지킬테니까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사후에 약속을 더 잘 지킬 사람, 더 확실히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독선적인 견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합의서 실천에 역점을 두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본합의서 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건을 이행·실천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의미부여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신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상회담에 연연해서 그렇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사교환이 되었을 때 특사가 누구의 특사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최고위급의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사의 임무와 그 기능으로 봐서 특사는 최고위급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 특사자신이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서 특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최고위급의 뜻을 받든다는 말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부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그렇게 연연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정부 정책의 정확한 뜻을 읽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楊澈訓 (sbs기자)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분위기가 유엔의 제재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방향으로 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을 쓰고 있고, 북한은 핵문제의 해결을 미국과의 수교나 관계개선, 또 경제협력같은 북한체제의 보장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핵카드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명분에 빠져서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 또 미국과의 수교인정, 경제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측에서 내걸고, 북측은 NPT의 완전한 복귀와 핵사찰 전면수용 등을 서로 내걸어서 일괄타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엿그제 한승주 외무부장관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지금 소위 일괄타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韓외무장관이 이야기 한 그 선에서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은 그 쪽으로 가는 조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핵투명성이 보장되면 북한의 핵카드의 유용성이 소실된다는 사실입니다. 핵카드의 활용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더이상 받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지금 楊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세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검토의 가치를 이 단계에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李光勳 총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은 질문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씩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金正瑞 (동아일보 논설위원)

지금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해결점으로 가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돼서 유엔안보리의 제재쪽으로 간다고 할 경우 우리 정부안에서도 서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정부의 기본방침은 제재로 가기전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모든 선택이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안보리 제재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질문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선택을 다 소진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蔣正幸 (서울신문 북한부장)

조금전에 언론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 자유주의자이시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부총리께서도 최근 공직에 취임한 후에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언론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아까 제가 언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해방 이후에 요즘처럼 언론이 막강한 힘을, 또 자율성을 갖고 있었던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힘에 값하는 언론의 언론권 행사가 중요하겠지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말도 구체적으로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불평은 없고, 좀 거시적으로 봐서 이만큼 언론이 힘을 가진 때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 그 힘에 값하는 역사적인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자체가 깊이 성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그것이 불평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 趙甲濟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월간조선 부장)

동구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 CIA에서 동구 공산권 국가에 대한 GNP 추산을 한것이 실제보다 3배내지, 심하게는 6배정도 과대평가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그쪽이 낮는데 좋게 평가를 했다는 뜻인데, 우리 통일원에서도 매년 북한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보고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의 GNP를 추계하는 방식이 '70년대초에 당시 정보부에서 개발한 방식, 이것은 또한 CIA의 동구권 경제에 대한 평가공식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인데, 그것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북한의 1인당 GNP를 900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련이라든지 동구권에서 추계한 북한의 1인

당 GNP는 300달러 내지 400달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인터뷰나 여러가지 감에 기초해서 300달러 내지 400달러 정도가 실제상황하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의 방식—이것을 재고하거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독 경우도 서독이 동독의 경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통일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정책을 폈듯이, 일반적으로 공산권의 경제에 대해서 과대평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경제력을 추정할 때 가장 정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충고를 듣고 좋은 자문을 들으려고 합니다.

○ 楊澈訓 (sbs기자)

아까 성향논쟁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알게 모르게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는 진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소 다른 견해를 보여주셨지만, 이 논쟁이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과 반개혁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일문제에 관해서 분단의 고착화라든

지 또는 통일지향이라는 서로 상반된 세력으로, 변형된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됐는데 부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와같은 논쟁이나 대립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 또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지난 날 '70년대 '80년대 진보·보수라고 하면 주로 사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정부가 들어서서 진보·보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 자신도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보·보수라는 그런 언어로 현상을 기술하기 보다는 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나 사정이라든지, 실명제 같은 경제제도를 통한 개혁이라든지간에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그 분들을 지난 날의 냉전이데올로기의 잣대로 진보·보수라고 분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새로운 정책이 들어오고 그 정책에 의해서 자기의 기득권이 약간 침해받거나 심하게 침해받게 되면 침해받은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측가능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안에 保革 갈등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보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기득권이 침해당하면 지킬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과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간에 서로의 긴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꼭 보수·진보라고 붙이는 것이 옳으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 사회 (李光勳 총무)

대표질문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 참석자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이해적인 일입니다만 오늘 참석자 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드리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골라서 질문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교환에 있어서 우리측 특사가 먼저 방북해야 된다는 북측 제의에 대해서 그 제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서 흡수통일이 안된다는 주장인데 가령 북한이 내년부터 매년 10%식 경제성장을 한다고 가정해도 10년후, 그러니까 2003년이나 돼야 현재 GNP의 2~3배가 될 정도이다. 그 때는 통일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때 비용은 왜 계산을 안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 부총리께서는 저서에서 남한체제 모순의 총체적 귀결로 6.25가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터무니없는 인식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국사회학회 회장이었을 때 언론사의 후원을 받아서 6.25전쟁에 대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포지움은 우리 학계에 오랫동안 있어 온 수정주의와 보수주의간의 전쟁 기원에 대한 논쟁이 비생산적이다. 이제는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6.25를 주제로 다룰 때는 전쟁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를 보자. 전쟁이 끼친 사회적인, 심리적인, 제도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결과를 보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때 그것을 했기 때문에 권두문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을 조직한 내 제자이고 지금 국립대학 교수로 있는 박교수와 함께 권두문을 썼습니다.

대개 회장이 되면 권두문을 쓸 때 제자가 써온 글을 받아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aragraph에 제가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좀 진보적인 분위기에 쌓여 있었던 우리 사회학계로서는 젊은 학자들이 북한의 현실을 연구할 때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남한의 정치현실을 연구하고 분석할 때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지배자가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짓 현실을 왜곡시켰다고 하는 각도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그렇게 보면서 북한은 그렇게 안 보려는 당시의 젊은 학자들

에게 그러한 시각을 고쳐야 한다. 이데올로기 비판을 할려면 남북을 다같이 해야된다 라는 주장을 그 부분에 넣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내 제자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제자가 쓴 부분에 해방으로 제기된 반제, 반봉건 민주변혁의 과제가 분단국가의 수렴으로 저지되면서 구조화된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그리고 체제모순의 총체적 귀결로써 한국전쟁이 발발된 것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남침이다. 북침이다.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정론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모 월간지에서 내가 직접 쓴 것이다 라고 단정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 제가 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을 쓴 것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자는 현실을 정확하게 추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인격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오인이 돼가지고 이로 인해 제가 받은 인격적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개방사회, 언론사회에서 지식인이 살아가는데 치루어야 할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견해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상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어느 편이라고 곧 속단하는 것도 학문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 다음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서 흡수통일이 안된다는 주장인데 가령 북한이 내년부터 매년 10%씩 경제성장을 한다고 가정해도 10년후, 그러니까 2003년이나 돼야 현재 GNP 2~3배가 될 정도인데 그 때는 통일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때 비용은 왜 계산을 안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연합단계를 거쳐서 통일한다 하는 이 3단계 통일방안의 하나의 기초는 공존공영입니다. 공존공영은 서로 경제교류를 가속화시키고 제도화를 통해서 알찬 열매를 맺음으로써 북한의 경제상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수준의 60%라든지 이렇게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의 2300만 인구는 우리의 동포입니다. 급하게 서두를 것 없이 평화적인 교류를 통해서나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북한의 경제수준을 올리자는 것이 공존공영의 정신입니다.

그 추정이 정확한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1/10정도밖에 안된다고 추정이 되는 그런 북한이 지금 단기간에 무너져서 이른바 흡수통일 과정을 밟는다고 할 때 그 결과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수상이 방한해서 저에게 『서독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 네 사람의 서독인이 사회주의권에서 제일 잘 산다는 동독인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데도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당신 나라는 경제력이 우리의 1/3, 1/4밖에 안되는데 두 사람의 남한 사람이 제일 못사는 북한의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떠내려 가니까 형이 들어가서 건져내서 겨우 살았는데 앞으로 10년쯤 숨을 헐

떡혈떡 썰 나라가 독일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생이 떠내려 가는 것을 보고 형이 뛰어들다가는 둘 다 빠져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의 비용이 참으로 크다고 하는 의미있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 (李光勳 총무)

정부차원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민간차원의 대화나 대북교류를 전면 자유화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와 관련해서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의 방북사건을 재평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아까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면 민간교류 문제는 괄목할 정도로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이 일으킨 사건은 당장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긴 역사의 안목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李光勳 총무)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韓부총리께서는 부총리직 이후에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있으신지?

○ 韓完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클쎄 정치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부총리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직책이 아닙니까?

○ 사회 (李光勳 총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관계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진지한 질문을 해준 대표질문자 네 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답변해 주신 부총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北韓日誌

北 韓 日 誌

- '93. 9. 11 ○ 임업대표단(단장 부장 김재울), 인도에서 진행된 임업에 관한 개발도상국 상급회의 참석후 귀환(8.28~9.11)
9. 12 ○ 黨대표단(단장 黨비서 崔泰福)-터키 노동당 대표단(단장 副위원장 메흐메르 베드리굴테이튼)간 「회담」 진행(平壤).
9. 13 ○ 외국문출판사대표단(단장 사장 겸 책임주필 황순명), 중국 向發.
○ 中國 全人大대표단(단장 상무위 副위원장 왕한빈), 평양 도착.
9. 14 ○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송신희동농장, 金日成시찰 교서관찰 위한 「궐기대회」 진행(9.13~14).
9. 15 ○ 양강도당 전원회의 진행(혜산).
9. 16 ○ 발명중국대표단(단장 총국장 유성광), 세계 발명 및 지적소유권 기구 제24차 총회 참석차 스위스 向發.
○ 社勞靑대표단(단장 副위원장 최현덕), 인도 向發.
9. 17 ○ 외교부대변인, 이스라엘-PLO간 팔레스타인자치에 관한 선언 조인 관련 기자회견.
9. 18 ○ 金日成, 6·3협동농장과 국영 3·3농장 현지지도

(平南).

-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 진행(4월~9.18).
-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서해상 어선나포 관련 「성명」 발표.
- 9. 19 ○ 金日成, 과일군 과수농장 현지지도(黃南).
- 祖平統 副위원장 정신혁, 서해상 어선나포 관련 「담화」 발표.
- 9. 20 ○ 중국 全人大대표단(단장 상무위 副위원장 왕한빈), 방북 종료(9.13~20).
- 평양주재 中國 신임대사 喬宗淮 부임.
- 9. 21 ○ 최고인민회의대표단(단장 의장 楊亨燮), 東南亞 방문차 평양 출발.
- 「조선반핵평화의사협회」대표단(단장 위원장 최창식), 멕시코 향발.
- 9. 22 ○ 祖平統서기국, 한국어선 나포관련 「기자회견」 진행.
- 「전국 자재공급 일꾼대회」 진행(9.21~22, 평양).
- 9. 23 ○ 중국 정부분화대표단(단장 부장 유충덕), 평양 도착.
- 9. 25 ○ 의회대표단(단장 인민회의 상설회의 이몽호), 호주에서 진행된 IPU 제90차 회의 참석후 귀환(9.7~25).
- 9. 26 ○ 金日成교시 관철위한 온천군 근로자들의 「결

기모임」진행(平南).

- 9. 27 ○ 金日成, 단군릉 현지지도(평양 강동군).
- 9. 29 ○ 黨대표단(단장 중앙위 부부장 지재룡)-브라질 국회의원 대표단(단장 하원 대외관계분과 부위원장 네이프 자브르)간 「회담」 진행(평양).
- 「전국가격일꾼대회」 진행(9.28~29, 평양)
- 9. 30 ○ 외교부대표단(단장 부부장 송원호), UN 제48차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9.30~10.15)
- 10. 1 ○ 金策공업종합대학 創立 45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 「제5차 전국 연극축전」 진행(평양).
- 10. 2 ○ 사회과학원, 檀君陵 발굴 「보고문」 발표.
- 祖平統서기국, 생화학무기 개발 부인 「성명」 발표.
- 총리 姜成山, 특사교환 관련 「전화통지문」 黃寅性 국무총리 앞으로 전달.
- 10. 3 ○ 남북군사공동위 북측위원장 金光鎭, 생화학무기개발 부인 「담화」 발표.
- 10. 4 ○ 중국 무역대표단(단장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부부장 정사림), 평양도착.
- 10. 5 ○ 최고인민회의대표단(단장 의장 楊亨燮)-라오스 민족의회대표단(단장 의장 싸만 위냐게르)간 「회담」 진행(베옌티안).
- 10. 6 ○ 北(단장 副총리 홍성남)-말레이시아 정부대

표단(단장 副총리 아브들 가파리 빈 바바)간
「회담」진행(평양).

○ 北-中間「경제·무역협조 의정서」조인(평양).

10. 7 ○ 「조선담배총회사」 산하 평양담배종이공장 준공.

○ 「애국예방약공장」조업식 진행(평양).

○ 순안 오리털가공공장 확장공사 완료.

10. 9 ○ 양덕지구 남대봉·북대봉밀영 「혁명사적 표식비 제막식」진행(평남).

10. 10 ○ 黨대표단(단장 당비서 金容淳)-이탈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대표단(단장 총비서 로베르트 가브리엘레)간 「회담」진행(평양).

10. 11 ○ UN사무총장이 IAEA 앞으로 보낸 서한관련 원자력공업부장 崔學根 「담화」발표.

10. 12 ○ 「北赤」위원장대리 이성호, 「대한적십자사」강영훈 총재 앞으로 김인서·함세환 송환관련 「편지」전달.

○ 美하원 亞·太소위원회대표단(단장 위원장 게리 에커먼), 방북종료(10.9~12).

○ 「조선반핵평화의사협회대표단」(단장 위원장 최창식), 멕시코에서 진행된 회의 참석후 귀환(9.21~10.21).

10. 13 ○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학술발표회 진행(10.12~13, 평양).

10. 14 ○ 장광광산 선광장 「조업식」진행(平南).

- 10. 15 ○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2차실무접촉회담 진행
(판문점).
- 10. 16 ○ 黨대표단(단장 당비서 黃長燁)－파라과이 2월
혁명당 대표단(단장 빅토르 산체스 빌라그라)
간 「회담」 진행(평양).
- 10. 17 ○ 朝總聯, 제18차 「분회열성자대회」 진행(10.16
~17).
- 10. 18 ○ 제8차 인민체육대회 개막(평양).
- 10. 19 ○ 「軍지휘관정치일꾼대회」 진행(10.18~19. 평
양).
○ 「전국 기술혁신전시회」 진행(9.21~10.19. 평
양).
○ 정주수출피복공장 확장공사 완료(平北).
- 10. 20 ○ 금강원동기합영회사 「조업식」 진행.
- 10. 21 ○ 조선 시조새 및 고생물 사적에 관한 학술발표
회 진행 (평양).
○ 祖國戰線대표단(단장 서기국장 유호준), 라오
스 向發.
- 10. 23 ○ 최고인민회의대표단(단장 의장 楊亨燮), 인도
네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스리랑카 등
東南亞 5개국 순방종료(9.21~10.23).
○ 社勞靑대표단(단장 위원장 崔龍海), 태국 向
發.
- 10. 25 ○ 東아시아대회 협의회(EAGA) 제7차회의 진행
(10.24~25. 평양).

-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3차실무접촉 진행(판문점).
- 北-핀란드간 「공업소유권 협조 합의서」 조인(평양).
- 10. 26 ○ 「전국 보건부문위생선전일꾼들의 경험발표회」 진행(25~26일).
- 10. 27 ○ 지방예산제 2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평양).
- 10. 28 ○ 黨대표단(단장 副부장 이영수), 덴마크 向發.
○ 駐러시아 대사 孫成弼, 핵사찰 관련 기자회견.
- 10. 29 ○ 尹基福(당비서),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장 임명.
- 10. 30 ○ 제8차 인민체육대회 진행(10.18~30, 평양).
- 10. 31 ○ 尹伊桑음악회 진행(10.27~31, 평양).
○ 외교부대변인, 을사조약 무효관련 기자회견.
○ 汎民聯해외본부, 黃皙暎 유죄판결 관련 「성명」 발표.
- 11. 1 ○ 中國 신화통신사대표단(단장 제1부사장 하찬충), 평양도착.
- 11. 2 ○ 北-마케도니아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의정서」 교환.
- 11. 3 ○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북측대표단(단장 박영수), 송영대 수석대표 앞으로 제4차 실무접촉 거부 「전화통지문」 전달.
- 11. 4 ○ 외교부대변인, 유엔의 對北결의안 관련 「담화」 발표

- 11. 5 ○ 中國 인민정치협상회의대표단(단장 전국위원회 부주석 洪學智), 평양도착.
- 11. 6 ○ 社勞靑대표단(단장 위원장 최룡해), 태국방문
마치고 귀환(10.23~11.6)
- 11. 7 ○ 姜成山(총리), 캄보디아 向發.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 動靜

- '93 統一教育專門委員 市・道協議會 지역순회 연수
실시현황

'93 통일교육전문위원 시·도협의회 지역순회 연수 실시현황

구분 협의회명	실시지역 (개 소)	실시인원 (명)	실시기간
서울	18	5,070	6.15~ 7.30
부산	11	3,180	4.12~ 5. 7
대구	7	2,053	5. 7~10.20
인천	6	2,100	9.15~10.29
광주	4	1,000	11. 5~11.13
대전	5	500	5.15~5.31
경기	31	14,680	5.11~ 6. 9
강원	18	4,600	9.24~10.22
충북	12	4,400	9. 1~11.30
충남	17	4,400	9.20~11.15
전북	16	4,201	10.18~10.25
전남	23	8,800	9.13~ 9.24
경북	29	7,130	5. 1~ 5.15
경남	24	15,500	8.25~11.30
제주	4	2,562	4.21 ~ 7.15
계	225	80,176	

— 時事資料 —

統一教育('93-4)

1993年 12月 日 印刷

1993年 12月 日 發行

統 一 研 修 院

(電話 901-7173)

印 刷 江 聞 印 刷 社

(전화 294-6651~3)
